

연구보고서 2003-06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홍 석 표
원 종 욱
백 화 중
김 성 일
홍 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산업의 구조를 고부가 가치형으로 전환하는 산업구조적 측면의 정책목표, 양질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 및 노동정책, 그리고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법·제도의 정비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이 도출되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경제가 성장에 그치지 않고 건실한 구조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배측면의 경제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한다. 분배정책의 지표가 되는 것이 가계의 소득계층구조이다. 소득계층의 구조가 건실해야 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효로 인해 경제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건실한 소득계층 구조는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은 모든 국가의 정책목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90년대 중반까지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빈곤·서민계층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였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극빈층뿐만 아니라 서민계층이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의 대부분이 쉽게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었다.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여 이들 계층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빈곤 차상위 계층의 상당수가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을 중산층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공적부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조세·교육·보건의료·사회보험 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의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산·서민층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 간 소득분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산·서민층의 소득은 하향한데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은 상승하여 경제위기의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건전한 소득계층 구조형성에 필요한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본원의 홍석표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종욱 부연구위원, 백화중 연구위원, 김성일 보건복지부 파견관, 그리고 홍미 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자료 생산에 큰 도움을 준 이연희 책임연구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본고를 세심히 읽고 완성하는 데에 귀중한 조언을 해 준 본원의 정경희 부연구위원과 이현주 책임연구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목 차

요 약	17
제 1장 서 론	4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2
제2절 선행연구	43
제2장 중산·서민층의 시장소득의 변화: 시계열분석	47
제1절 연도별 중위소득 수준 변화	49
제2절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 시장소득기준 소득계층 구성비의 변화를 중심으로	51
제3절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경상소득기준 소득계층 구성비의 변화)	55
제4절 소득구조분석	57
제5절 정책 시사점	60
제3장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생활실태분석	63
제1절 소득분위별 도시근로자가구의 분포현황	63
제2절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66
제3절 소득계층별 소득, 지출수준비교	69
제4절 가계수지별 소비지출액비교	70
제5절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총수입구성비 비교	77
제6절 계층별 가계수지의 절대수준비교	79
제7절 가구특성과 가계수지	90

제4장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찰	105
제1절 개 요	105
제2절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	106
제3절 생활안정대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08
제4절 생활안정대책의 전반적인 인지도 및 만족도	114
제5절 정책 시사점	177
제5장 결 론	179
참고문헌	182
부 록	185

표 목 차

〈표 2- 1〉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성장률	49
〈표 2- 2〉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기준별 중위소득(명목)	50
〈표 2- 3〉 경제위기 전후의 소득기준별 중위소득(1995년 불변가격 기준) ...	51
〈표 2- 4〉 평균시장소득(시장소득기준)	54
〈표 2- 5〉 고소득층 기준 평균소득 상대비율	55
〈표 2- 6〉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비중(시장소득기준)	58
〈표 2- 7〉 사업 및 부업 소득비중 변화	59
〈표 2- 8〉 고소득층 대비 상대소득 비율	60
〈표 3- 1〉 소득계층분류1	65
〈표 3- 2〉 소득계층분류2	65
〈표 3- 3〉 소득계층별 적자·흑자가구 분류1(소득-가계지출)	67
〈표 3- 4〉 소득계층별 적자·흑자가구 분류2 (소득+자산감소-부채증가 -가계지출)	68
〈표 3- 5〉 소득계층별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소비지출액	70
〈표 3- 6〉 소득계층별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소비비중내용	71
〈표 3- 7〉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의 내용	72
〈표 3- 8〉 소득계층별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소비비중내용	73
〈표 3- 9〉 한계계층(제1계층)의 거주지역별 소비비중내용	74
〈표 3-10〉 서민층(제2계층)의 거주지역별 소비비중내용	75
〈표 3-11〉 중산층(제3계층)의 거주지역별 소비비중내용	76
〈표 3-12〉 고소득층(제4계층)의 거주지역별 소비비중내용	77
〈표 3-13〉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총수입구성비중(2002)	78
〈표 3-14〉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총수입 구성비중(2001)	78

〈표 3-15〉 한계계층(제1계층)의 적자·흑자규모(2002)	79
〈표 3-16〉 한계계층(제1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1)	80
〈표 3-17〉 서민계층(제2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2)	81
〈표 3-18〉 서민계층(제2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1)	82
〈표 3-19〉 중산층(제3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2)	83
〈표 3-20〉 중산층(제3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1)	83
〈표 3-21〉 고소득계층(제4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2)	84
〈표 3-22〉 고소득계층(제4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1)	85
〈표 3-23〉 한계계층(제1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2)	86
〈표 3-24〉 서민층(제2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2)	86
〈표 3-25〉 중산층(제3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2)	87
〈표 3-26〉 고소득층(제4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2)	87
〈표 3-27〉 한계계층(제1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1)	88
〈표 3-28〉 서민층(제2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1)	88
〈표 3-29〉 중산층(제3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1)	89
〈표 3-30〉 고소득층(제4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1)	89
〈표 3-31〉 소득계층별 가구주종사상 지위와 가계수지	90
〈표 3-32〉 소득계층별 가구원수와 가계수지	92
〈표 3-33〉 가구주 성별과 가계수지	94
〈표 3-34〉 가구주 연령과 가계수지	95
〈표 3-35〉 가구주 교육수준과 가계수지	98
〈표 3-36〉 소득계층의 거주지역별 소비지출구성	99
〈표 3-37〉 소득계층의 거주지역별 소비지출금액	102
〈표 4-1〉 중산·서민층 기본적 생활안정 지원대책	107
〈표 4-2〉 소득계층별 소득세 금액	108
〈표 4-3〉 경상소득 대비 소득세 비중	109
〈표 4-4〉 한국의 직·간접세 비율 (1996~2003년)	110
〈표 4-5〉 교육비 지출금액	111

〈표 4-6〉 경상소득 대비 교육비지출 비중	111
〈표 4-7〉 보충교육비 지출금액	112
〈표 4-8〉 경상소득 대비 보충교육비 지출 비중	112
〈표 4-9〉 보건의료지출금액	113
〈표 4-10〉 경상소득 대비 보건의료지출 비중	113
〈표 4-11〉 주거비 금액	114
〈표 4-12〉 경상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중	114
〈표 4-13〉 전체 응답가구의 일반적 특성	116
〈표 4-14〉 전체 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	117
〈표 4-15〉 전체 응답가구의 소득계층 분류	118
〈표 4-16〉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119
〈표 4-17〉 소득계층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120
〈표 4-18〉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121
〈표 4-19〉 가구주 연령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121
〈표 4-2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122
〈표 4-21〉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123
〈표 4-22〉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123
〈표 4-23〉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	124
〈표 4-24〉 소득계층 그룹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	124
〈표 4-25〉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	125

〈표 4-26〉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	125
〈표 4-27〉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	126
〈표 4-28〉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126
〈표 4-29〉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만족도	127
〈표 4-30〉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	128
〈표 4-31〉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소득계층 그룹별)	129
〈표 4-32〉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	130
〈표 4-33〉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인지도	130
〈표 4-34〉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인지도	131
〈표 4-35〉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	131
〈표 4-36〉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	132
〈표 4-37〉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132
〈표 4-38〉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그룹별)	133
〈표 4-39〉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133
〈표 4-40〉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134
〈표 4-41〉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134
〈표 4-42〉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135
〈표 4-43〉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135
〈표 4-44〉 기본생계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136
〈표 4-45〉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만족도	137
〈표 4-46〉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	138
〈표 4-47〉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소득계층 그룹별)	138
〈표 4-48〉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	139
〈표 4-49〉 가구주 연령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	140
〈표 4-5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	141

〈표 4-51〉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	141
〈표 4-52〉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	142
〈표 4-53〉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	142
〈표 4-54〉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소득계층 그룹별)	143
〈표 4-55〉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	143
〈표 4-56〉	가구주 연령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	144
〈표 4-57〉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	144
〈표 4-58〉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	145
〈표 4-59〉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	145
〈표 4-60〉	의료보장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146
〈표 4-61〉	의료보장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소득계층 그룹별)	146
〈표 4-62〉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만족도	147
〈표 4-63〉	가구주 연령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만족도	148
〈표 4-64〉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만족도	149
〈표 4-65〉	거주대책에 대한 인지도	149
〈표 4-66〉	거주대책에 대한 인지도(소득계층 그룹별)	150
〈표 4-67〉	가구주 성별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	151
〈표 4-68〉	가구주 연령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	151
〈표 4-69〉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	152
〈표 4-70〉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	153
〈표 4-71〉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	153
〈표 4-72〉	거주대책에 대한 참여도	154
〈표 4-73〉	거주대책에 대한 참여도(소득계층 그룹별)	154
〈표 4-74〉	가구주 성별에 따른 거주대책에 대한 참여도	155
〈표 4-75〉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거주대책에 대한 참여도	155
〈표 4-76〉	거주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155
〈표 4-77〉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157
〈표 4-78〉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소득계층 그룹별)	157

〈표 4-79〉	가구주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158
〈표 4-80〉	가구주 연령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159
〈표 4-81〉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159
〈표 4-82〉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160
〈표 4-83〉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160
〈표 4-84〉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참여도	161
〈표 4-85〉	복지서비스 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161
〈표 4-86〉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참여도	162
〈표 4-87〉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참여도(소득계층 그룹별)	162
〈표 4-88〉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163
〈표 4-89〉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163
〈표 4-9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164
〈표 4-91〉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164
〈표 4-92〉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165
〈표 4-93〉	기타의 생활안정대책 중 참여한 사업	165
〈표 4-94〉	기타의 생활안정대책 중 참여한 사업	166
〈표 4-95〉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 중 참여한 사업	166
〈표 4-96〉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 중 참여한 사업	167
〈표 4-97〉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 중 참여한 사업	167
〈표 4-98〉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 중 참여한 사업	167
〈표 4-99〉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 중 참여한 사업	168
〈표 4-100〉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168
〈표 4-101〉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소득계층 그룹별)	169
〈표 4-102〉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	170
〈표 4-103〉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	170

〈표 4-104〉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	… 171
〈표 4-105〉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	… 171
〈표 4-106〉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	… 172
〈표 4-107〉	생활안정대책 가운데 앞으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대책에 대한 의견	… 174
〈표 4-108〉	생활안정대책 가운데 앞으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대책에 대한 의견(소득계층 그룹별)	… 175
〈표 4-109〉	전체 응답가구의 복지욕구별 일반 특성	… 176

그림 목 차

[그림 2- 1]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 비중 변화	53
[그림 2- 2]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 비중 변화	56
[그림 2- 3]	경상소득대비 이전소득 비중 변화	57
[그림 4- 1]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대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120
[그림 4- 2]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비교 ..	127
[그림 4- 3]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129
[그림 4- 4]	기본생계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비교	136
[그림 4- 5]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139
[그림 4- 6]	의료보장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비교	147
[그림 4- 7]	거주대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150
[그림 4- 8]	거주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비교	156
[그림 4- 9]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158
[그림 4-10]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비교	169
[그림 4-11]	5가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172
[그림 4-12]	5가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비교	173
[그림 4-13]	5가지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비교	173

Abstract

A Study of Measures for Stabilizing the Living Conditions of Low-to-Middle Income Groups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Korea has taken various measures for stabilizing the living conditions of low-to-middle income groups, augmenting its expenditures on social welfare to a significant extent a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wide range of social safety net programs.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many in low-to-middle income groups are still left in a difficult situation, not least when it comes to housing, education and healthcare. Also, it has often been pointed out that, in the process of income distribution since the end of 1997, the imbalance in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has favored high-income groups while reducing the earnings of low-to-middle income groups. This study confirms the validity of such an argument and attempts to craft a direction for new measures to help low-to-middle income households stabilize their living conditions, a prerequisite for forming a sound income distribution structure.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각종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조기 구축하는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산·서민층은 교육·보건의료·주거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 게다가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간 소득분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산·서민층의 소득은 하향한 데 비해 상위층의 소득은 상승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대빈곤층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계속해서 소득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절대빈곤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했으나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건전한 소득계층 구조형성에 필요한 향후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2. 중산·서민층의 시장소득의 변화

-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명목중위소득은 경제위기 전인 1996년 1,700,000원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708,159원으로 미미하나마 증가한 후, 2000년 1,891,600원, 2002년 2,230,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명목중위소득은 경제위기 전인 1996년 1,742,950원에서 1998년 1,751,795원, 2000년 1,950,000원, 2002년 2,298,000원으로 지속적인 증가함.
 - 그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명목중위소득은 경제위기 전인 1996년 1,849,600원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815,000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 2,032,200원, 2002년 2,400,000원으로 지속적인 증가함.
 - 명목소득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시장소득, 경상소득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도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으나,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감소함.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비경상소득의 감소폭이 경상소득이나 시장소득의 증가폭보다 커 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이 감소함.
 - 외환위기로 인한 중위소득의 감소는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및 기타 비경상소득이 경기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임.

〈표 1〉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기준별 중위소득(명목)

(단위: 원)

구 분	1996	1998	2000	2002
시장소득	1,700,000	1,708,159	1,891,600	2,230,000
경상소득	1,742,950	1,751,795	1,950,000	2,298,000
소 득	1,849,600	1,815,000	2,032,200	2,400,000

자료: 『도시경제연보』, 각 연도.

- 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질중위소득이 경제위기 전인 1996년 1,780,173원에서 경제위기 직후에는 1998년 1,611,901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 1,862,695원, 2002년 2,110,818원으로 6.2% 증가함.
 -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질 중위소득은 경제위기 전인 1996년 1,677,526원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555,768원으로 감소한 후, 2000년 1,787,351원으로 증가한 후, 2002년 2,021,108원으로 증가함.
 -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질중위소득은 경제위기 전인 1996년 1,636,189원에서 1998년 1,517,015원으로 감소한 후, 2000년 1,733,822원으로 증가한 후, 2002년에는 1,961,302원으로 증가함.
 - 199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중위소득은 명목중위소득의 경우와는 달리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감소하였다가 2000년부터 증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음.

〈표 2〉 경제위기 전후의 소득기준별 중위소득(199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원)

구 분	1996	1998	2000	2002
시장소득	1,636,189	1,517,015	1,733,822	1,961,302
경상소득	1,677,526	1,555,768	1,787,351	2,021,108
소 득	1,780,173	1,611,901	1,862,695	2,110,818

자료: 『도시경제연보』, 각 연도

- 각 소득계층의 구성비의 크기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전후기간인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동안 서민층이 35.3~3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산층 26.5~27.2%, 서민층 22.9%~23.6%, 한계계층이 11.7%~14.6%임.
 -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변화는 중산층이 감소할 때 고소득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증가할 때 고소득층이 감소함.

- 경제위기 전부터 경제위기 이후의 기간동안 경기변동에 따라 소득계층의 변화가 이들 두 계층 간의 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계층 변화를 살펴보면 서민층은 1996년 38.27%에서 1998년 36.8%, 2000년 36.5%, 그리고 2002년 35.3%로 감소한 반면, 한계계층은 동 기간동안 11.7%에서 출발하여 13.2%, 13.5%, 14.6%로 증가함.
 - 경제위기이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이 점점 한계계층으로 편입됨.
- 중산층과 한계계층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구성된 중위소득 이상계층과 서민층과 한계계층으로 구성된 중위소득 미만계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경우에는 고소득계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감소하고, 경기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층이 감소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는 양상임.
 - 서민층과 한계계층의 경우는 경제위기 이후 한계계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서민층이 지속적으로 한계계층에 편입되고 있음.
 - 서민층이 중산층보다 경제위기와 같은 큰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
- 중산층과 서민층의 상대소득비율은 1996년 이후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감소함.
- 중산층은 1996년 58.2% 수준에서 2002년 57.3%수준으로 0.9% 감소하였고, 서민층은 동 기간동안 36.0%에서 35.5%로 0.5% 감소함.

- 중산층의 상대소득비율의 감소폭이 0.4% 큼.
- 한계계층의 경우에도 1996년의 16.5%에서 2002년 16.2%로 0.3% 감소함.
 - 타 계층과는 달리 1998년에 15.8%, 2000년 15.7%로 1996년에 비하여 0.8% 감소한 후 2002년에는 다시 증가함.
 - 경제위기로 한계계층의 소득감소폭이 제일 컸으나, 2002년도의 상대소득비율의 상승은 정부의 한계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의 결과로 생각됨.

〈표 3〉 고소득층 기준 평균소득 상대비율

(단위: %)

구 분	1996	1998	2000	2002
고소득층	100.0	100.0	100.0	100.0
중산층	58.2	58.1	57.9	57.3
서민층	36.0	36.0	35.7	35.5
한계계층	16.5	15.8	15.7	16.2

자료: 『도시경제연보』, 각 연도

-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 소득계층의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을 합한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시장소득의 96.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의 소득계층별 크기는 서민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산층, 한계계층, 고소득층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의 크기 순과는 반대로 고소득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계계층, 중산층, 서민층 순으로 나타나게 됨.

- 모든 소득계층의 연도별생산활동 소득비중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은 근로소득의 비중 증가보다는 사업 및 부업 소득비중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고소득층은 사업 및 부업소득이 1996년 5.0%에서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5.6% 수준이 되었다가 2002년에는 5.1%로 감소됨.
 - 중산층은 1996년 3.6%에서 1998년 4.0%로, 2000년 4.1%로, 2002년 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한편 서민층의 경우에도 1996년 2.0%에서, 1998년 2.4%로, 2000년 3.1%로 2002년 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한계계층은 1996년 1.5%에서 1998년에는 2.9%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2000년도에도 3.4%로 증가하였다가 2002년에는 2.8%로 감소함.

- 근로소득의 경우 중산층과 서민층의 고소득층대비 상대소득비율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 및 부업소득의 상대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재산소득의 상대비율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감소하였다가 2000년 이후 증가함.
 - 중산층, 서민층 및 한계계층의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의 원인이 근로소득 차이에서 기인함.
 - 중산층 이하의 소득계층은 재산소득의 경우 상대비율이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음.
 - 재산소득이 시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소득수준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인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경우,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부분 보다는 재산소득부분에 대한 누진률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고소득층에 누진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도시가계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위소득 이상계층에서는 경제위기와 같은 경기침체의 경우에는 중산층이 감소하고, 경기가 호전되는 시기에는 중산층이 증가하는 양상임.
- 서민층의 경우는 경제위기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민층이 지속적으로 한계계층에 편입되고 있음.
- 서민층이 중산층보다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소득구조를 갖고 있음.

- 외부충격이 사라진 후에도 외부충격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고소득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 소득계층의 상대소득 비율을 경제위기 전인 1996년과 2002년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중산층은 0.9%, 서민층은 0.5%, 한계계층은 0.3%임.

- 감소폭의 크기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정책의 결과로 생각됨.

□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민층과 중산층의 비중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증가하여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소득계층의 양극화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사실을 뒷받침함.

- 서민층의 증가폭이 중산층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한계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안전망이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어 중산서민층의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함.
 - 소득세의 누진율의 강화가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경제위기 이후 고소득층의 재산소득비중이 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줄어들었음.
 - 그러나 재산소득의 상대비율이 근로소득이나 사업 및 부업소득보다는 매우 낮음.
 - 재산소득에 대한 누진율을 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3.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생활실태

- 소득분위를 한계계층,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별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였음.
 -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 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00% 미만인 계층, 중위소득 100% 이상 150% 미만인 계층, 끝으로 중위소득 150% 이상인 계층으로 구분하였음.
 - 분석의 목적은 계층별 가계수지를 적자가구와 흑자가구로 구분하여 집단 간 수지의 절대규모, 격차와 분포 등을 살펴보았음.
 - 특히, 중산·서민층이 다른 계층과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그리고 가계 수지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고 소비항목별로 구성의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도 분석해 보았음.

-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소득기준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소득을 사용하였음.
 - 『도시가계조사』에서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자산감소와 부채증가로 구성된 기타수입은 제외된 금액임. 총수입은 소득에 자산감소와 부채증가가 합친 금액임.
- 서민계층에 해당되는 2계층은 가구점유비중이 가장 높아 37.8%였고, 이들 가구의 평균총소득은 1,809,407원, 평균경상소득은 1,753,923원이었음.
 - 서민계층 중 공적보조를 받는 가구는 685가구로 한계계층의 17%를 차지하였고 서민계층 다음으로 점유비중이 높은 중산계층은 점유비중이 26.8%이고 평균총소득은 2,926,626원, 평균경상소득은 2,832,927원 끝으로 고소득계층은 점유비중이 3번째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총소득은 5,334,804원, 평균경상소득은 4,819,984원이었음.

〈표 4〉 소득계층분류1

(단위: 개, %, 원)

	대상가구수	비중	소득	경상소득(평균)
4 계층(고소득)	7,683	23.2	5,334,804	4,819,984
3 계층(중산)	8,891	26.8	2,926,626	2,832,927
2 계층(서민)	12,519	37.8	1,809,407	1,753,923
1 계층(한계)	4,053	12.2	869,275	837,043

소득계층별로 소득에서 가계지출을 감한 후 차감액이 양수이면 흑자가구로 음수이면 적자가구로 분류하였음.

- 소득등급이 내려갈수록 적자가구의 비중이 커지며, 4 계층의 적자가구비중

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9.5%인데 반해 최저등급인 한계계층은 52.7%로 적자가구의 비중이 흑자가구의 비중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소득기준을 소득이 아닌 경상소득으로 정하는 경우, 각 계층별 적자가구의 비중은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제4계층은 9.5%에서 14.4%로, 제3계층은 15.5%에서 18.8%, 제2계층은 26.0%에서 29.7%, 그리고 제1계층은 52.7%에서 55.8%로 점유비중이 늘어났음.

- 거주지별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제4계층 중 적자가구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24.8%, 제3계층은 20.2%, 제2계층은 21.7%, 제1계층은 19.6%로 조사되었음.

· 이 비중은 계층별 서울거주비중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흑자가구와 적자가구간 서울과 기타도시의 거주지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소득계층별로 적자의 원인이 소득수준이 낮는데 기인하는 것인지 소득보다는 지출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계층별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평균소득과 평균지출을 분석해 보았음.

- 분석결과 적자가구는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도 소득이 비적자가구에 비해 낮고 가계지출은 소득의 격차 보다 훨씬 높은 폭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적자의 원인은 소득수준 보다는 소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계층별로 소비항목별 비중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적자가구와 흑자가구별로 소비지출의 절대금액을 비

교해 보았음.

- 모든 소득계층에서 적자가구는 흑자가구에 비해 모든 항목에 대해 소비 지출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냈음.
 - 식료품의 경우, 적자가구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1.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가구집기 사용품도 1, 2, 3계층은 약 3배, 제4계층은 5배의 차이를 내고 있으며 보건의료는 2~3배, 교육은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적자가구의 적자의 원인은 소득보다는 지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소득계층별로 구분한 후, 계층 내에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를 분리하여 소비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음.

- 모든 소득계층에서 적자가구가 흑자가구에 비해 식료품의 소비비중이 더 낮고, 주거비의 경우에는 계층 1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에서 적자가구가 흑자가구 보다 소비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적자가구가 흑자가구에 비해 소비를 눈에 띄게 많이 하는 항목은 교육으로 1계층의 경우 적자가구가 흑자가구에 비해 약 2배 정도 더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거주지역(서울에 거주하는 것이 타 도시에 비해) 소비의 규모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았음.

- 한계계층인 제1계층과 서민층인 제2계층을 거주지 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서울거주가구와 기타 시지역 거주가구간 소비비중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 중산층인 제3계층은 적자가구의 경우, 서울지역거주가가 타 도시거주

가구에 비해 주거비, 광열·수도,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항목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적자가구의 경우,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교양·오락 항목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고소득계층인 제4계층에서는 적자가구의 경우, 서울거주가가 타 도시 거주 가구에 비해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집기, 교육, 교양·오락 항목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적자가구의 경우,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양·오락 항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적자가구가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총 수입의 구성비를 분석해 보았음.

- 적자가구는 총수입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흑자가구에 비해 낮고 자산감소소득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적자가구의 소비는 경상소득과 함께 자산감소로 인한 기타소득을 고려하여 소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1년에 비해 2002년도에 도시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의 비중은 줄고 자산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계계층의 경우, 적자가구의 평균적자규모는 서울거주 가구보다 기타 시 거주가가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의 경우 -520,946원으로 기타 시는 -533,447원 약 4만 8천원의 차이를 보이고 비적자가구의 흑자규모는 서울과 기타시 간에 약 7천원 정도로 기타시가 높게 나타났음.
- 평균적으로 흑자가구는 적자가구의 적자금액의 4배 이상의 흑자규모를 보이고 있음.

- 적자가구 중 서울거주가구의 표준편차는 577,435원으로 평균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며 평균주변에 많은 가구들이 군집해 있다는 것을 시사함.
- 그러나 기타 시 거주가구는 표준편차가 평균의 약 2배로 서울지역거주가구에 비해 넓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2년에는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절대격차 또는 순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표준편차도 흑자와 적자구모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가계수지를 자산감소와 부채증가까지 감안한 순개념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 계층별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가계수지금액을 비교해 보았음.

- 순개념 기준으로 적자가구란 소비는 순부채의 증가로 충당되는 것을 의미함.
- 한계계층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일반가계수지(소득-가계지출)와 비교해 볼 때, 순가계수지 적자가구의 비중은 감소하나 가계수지적자액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적자가구의 경우, 일반가계수지와 비교해서 서울거주적자가구의 적자액은 -25만원 증가하였고 기타 시 거주 적자가구는 -35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흑자가계의 수지도 서울거주가구의 경우 50만원, 기타 시 거주가구는 평균 30만원 증가하였음.
- 서민층의 경우에도 순가계수지로 구분하는 경우, 일반가계수지에 비해 적자금액과 흑자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거주 적자가구의 경우, 적자액이 -100만원 더 많고, 기타 시는 -110만원, 흑자액은 서울 100만원, 기타 시 110만원으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순격차는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음.

- 중산층의 경우에는 서울거주 적자가구의 경우, 적자금액이 -53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준은 고소득계층의 적자금액증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서울거주 중산층의 순적자 가구의 부채증가는 고소득층과 같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중산층의 기타 시 거주 가구의 적자액증가는 -360만원이고 흑자액 증가는 150만원과 160만원으로 분석되었음. 중산층부터는 한계계층과 서민층과는 달리 적자금액의 증가가 흑자액의 증가보다 몇 배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순가계수지의 경우, 적자액의 증가가 흑자액의 증가 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적자가구의 경우 약 530만원의 적자액증가를 보이고 흑자가구의 흑자액은 약 250만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와 가계수지관계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았음.

- 종사상 지위는 크게 공무원, 공무원의 사무종사자,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 등 4개로 구분됨.
- 한계계층에서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기능공 및 상용노동자가 56.1%로 가장 비중이 높고 서민계층에서도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의 비중이 57.9%로 가장 높으나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비중은 한계계층보다 적어 14.3%를 차지하고 있음.
- 서민계층은 한계계층에 비해 공무원의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산층에서도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의 비중이 45.1%로 가장 높으나 공무원의 사무종사자의 비중 36.5%로 서민층에 비해 약 10%정도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고소득층인 4계층은 공무원의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4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로 31.4%를 차지하고 있음.
- 종사상 지위와 가계수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사무종사자 또는 공무원이 다른 종사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적자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각 계층별 순위를 볼 때 종사상 지위가 안정될수록 적자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하였음.

4.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생활안정대책이 중산·서민층의 생활실태에 뚜렷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지난 7년간 도시가계연보에 나타난 중산·서민층의 조세·교육·보건의료 등의 생활실태지표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음.
 - 전화조사를 통해 현행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대책, 기본생계대책, 의료보장대책, 거주대책 및 복지서비스대책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실태 파악
- 경제위기 이후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취한 대책 중 핵심이 되는 대책은 조세정책(근로자 세부담 경감 등)과 사회안전망 제도 등을 통한 중산·서민층 기본적 생활안정 지원정책임.
 -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이 시행되어 왔음.

- 특히 1998년에 악화된 중산·서민층의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산·서민층 지원대책으로 이전에 비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큰 폭으로 경감하는 조세정책이 1999년부터 시행되었음.
- 근로소득세 세율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총 44조의 근로소득세가 경감되었음(재경부,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2003년 9월).

□ 중산·서민층의 기본적 생활안정 지원정책으로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및 4대 사회보험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 제도의 확충을 추진하여 왔음.

-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강화 및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음.
- 또한 서민생활의 부담완화를 위한 자녀교육비 지원, 지역의료보험 지원,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등의 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이 추진되어 왔음.

□ 소득분위별 소득세의 부담정도를 경상소득에 대한 비율로 살펴보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경우 고소득층 4.25%, 중산층 1.66%, 서민층 0.72%, 한계계층 0.13%로 나타났음.

- 근로자 소득세부담 경감폭이 확대된 1999년에는 고소득층 3.10%, 중산층 1.50%, 서민층 0.64%, 한계계층 0.12%로 전 소득계층의 경상소득 대비 소득세 부담 비율이 감소되었음.
- 특이한 점은 소득세 부담 비율의 감소폭이 고소득층이 가장 크다는 것임.
- 2000년과 2001년의 고소득층의 경상소득 대비 소득세 부담비율은 각각 3.56%, 3.83%로 1999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2002년에는 3.64%로 1998년보다 0.61% 낮은 수치를 나타냈음. 이와 반면에 중산층의 경상소득 대비 소득세 부담비율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1.66%에서 1.72%로 오히려 증가하였음.
- 서민층의 경우에는 0.04% 감소하였으나 고소득층의 감소폭(0.61%)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임.

□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외국(일본,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높고, 경제위기 이후 간접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반적인 조세정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간접세는 비례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요구되는 부담률이 높아져서 형평성을 악화하게 함.
- 특히, 경제위기 이후 높아진 간접세 비중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위주로 조세제도를 전환하여야 할 것임.

□ 교육비가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양상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적은 소득으로 교육비에 낮은 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교육비로 말미암아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의미임.
- 1996년 경상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고소득층 6.64%, 중산층 7.13%, 서민층 7.10%, 한계계층 10.19%이었음.
- 2002년에는 고소득층 7.48%, 중산층 8.17%, 서민층 8.34%, 한계계층 10.64%로 각 계층의 경상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이 경제위기 이전

보다 증가하였음. 특히 중산·서민층의 비중은 고소득층에 비해 더욱 증가되었음.

- 경상소득대비 보충교육비 지출 비중은 소득계층에 거의 역비례하여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다시 말하면 보충교육비가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고, 게다가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중산·서민층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은 중산·서민층 가계의 파행적 운영을 의미
- 소득분위별 보건의료비지출의 부담정도를 경상소득에 대한 비율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제위기 이전자료인 1997년의 경상소득 대비 보건의료지출 비중은 고소득층 2.58%, 중산층 2.94%, 서민층 3.74%, 한계계층 7.78%이었음.
 - 이러한 수치는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 고소득층 2.46%, 중산층 2.95%, 서민층 3.66%, 한계계층 11%로 나타나 한계계층의 보건의료비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2002년의 자료에 의하면 고소득층 2.61%, 중산층 3.01%, 서민층 3.95%, 한계계층 7.37%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경상소득 대비 보건의료지출 비중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저소득층의 높은 보건의료지출 비중은 저소득층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제도 등의 사회안전망제도가 적절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주거측면도 보건의료측면과 같이 저소득층의 경상소득 대비 주거비지출 비중이 고소득층보다 높음.

- 경제위기 이후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지출비중이 다소라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도한 주거비로 인해 중산·서민층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5. 생활안정대책의 전반적인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 현행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대책, 기본생계대책, 의료보장대책, 거주대책 및 복지서비스대책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함.**
- 조사규모 및 방법 : 표본추출은 2002년 자활사업 실태조사 1차 가구 데이터 10,000가구 중에서 가구당 개인소득이 하위 50%인 가구(중위소득 57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함.**
- 응답 가구의 일반적 특성**
 - 전화조사가 완료된 응답가구원은 총 422명으로 대도시 지역에 약 34.4%, 중소도시 지역에 25.6%, 읍·면 지역에 40%가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가 구에서 4인 이상 가구는 50.8%, 3인 가구는 14.0%, 2인 가구는 21.8%, 1인 가구는 13.5%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가구는 58.5%, 부부가구 18.0%, 단독가구 12.8%, 부자가구, 모자가구,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현황을 보면 전체가구에서 자가(65.4%), 전세(17.8%), 월세(9.5%), 무상(7.3%) 순으로 나타남.
 - 전체응답가구의 가구당 개인소득 현황을 보면, 중위소득(57만원)의 90~80% 사이에 전체응답가구의 26.5%인 112가구가, 80~70% 사이에 전체가구의 23.9%인 101가구가, 70~60% 사이에 전체 가구의 14.0%인 59가구가, 100~90% 사이에 전체 가구의 10.2%인 43가구가, 60~50% 사이에 전

체 가구의 6.9%인 20가구가, 그리고 중위소득 50% 미만에 전체 가구의 18.5%인 78가구가 분포되어 있음.

- 전체 응답가구의 가구주 성별을 보면 남성인 경우가 81.3%이고 여성인 경우가 18.7%를 차지하고 있고 40대가 25.8%, 30대가 19.7%, 70대가 18.0%, 60대가 17.1%, 50대가 15.2% 순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비율이 32.8%로 가장 높으며 초졸 21.1%, 무학 15.4%, 대졸 12.1%, 중졸 11.6%, 전문대졸 5.0%, 대학원졸 1.9%로 분포되어 있고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가 41.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가 31.8%, 연령이 높아서 일할 수 없는 경우가 13.7%, 장애·질환 등으로 일할 수 없음이 5.7%, 고용주가 2.1%, 구직활동 중인 경우가 1.2% 등으로 분포되어 있음.
 - 가구주의 장애여부를 살펴보면 비해당의 경우가 95.3%이고 등록장애인이 3.5%, 비등록장애인이 1.2%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주의 만성질환여부를 보면 전체가구의 26.5%가 만성질환이 있고 73.5%가 만성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와 해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현행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바를 전체 응답가구의 특성과 소득계층별로 분류하여 결과를 정리, 분석하였음.
-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대책에 대한 조사 결과
- 인지도: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거의 모르고 있다’ 54.7%, ‘절반정도 알고 있다’ 36.8%, ‘거의 알고 있다’는 8.5%에 그침.
 - 참여여부: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명으로 4.3%에 불과했으며 95.7%인 404명은 참여한 사업이 없다고 응답함.

- 만족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8명,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명임.

□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조사결과

- 인지도: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절반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79명으로 4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거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176명으로 41.8%를 차지함. 그리고 ‘거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7명으로 15.8%에 그침.
- 참여여부: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참여한 사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명으로 5.7%에 불과했으며 94.3%인 398명은 참여한 사업이 없다고 응답함.
- 만족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명으로 44.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명으로 28.0%,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7명으로 28.0%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조사결과

- 인지도: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7명으로 46.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59명으로 37.7%를 차지하고 ‘거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명으로 15.6%에 그침.
- 참여여부: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2명으로 7.6%였고 92.4%인 390명은 참여한 사업이 없다고 응답함.
- 만족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2명으로 6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으로 17.7%였고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6명으로 17.7%를 차지함.

□ 거주대책에 대한 조사결과

- 인지도: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19명으로 51.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8명으로 30.3%, ‘거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5명으로 17.8%을 차지함.
- 참여여부: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명으로 3.3%에 불과했으며 96.7%인 408명은 참여한 사업이 없다고 응답함.
- 만족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명으로 50.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명으로 28.6%,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음.

□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조사결과

- 인지도: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1명으로 5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2명으로 28.9%, ‘거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9명으로 11.6%임을 알 수 있음.
- 참여여부: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겨우 3명으로 0.7%에 불과했으며 99.3%인 419명은 참여한 사업이 없다고 응답함.
- 만족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명으로 66.7%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1명은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함.

□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조사 결과

- 참여도: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3명으로 22.0%였고 78.0%인 329명은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 기타의 참여 사업대책: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93명 중 84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명이 영농자금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그 밖에 ‘장애인 혜택’, ‘연금’, ‘등록금 지원’, ‘건강검진’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함.
- 만족도: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명으로 65.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도움 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명으로 26.9%임.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7명으로 7.5%를 차지함.

□ 종합분석

-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해 본 결과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복지서비스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음.
-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비교시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았으나 대부분 낮은 참여율을 보임.
-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경우의 만족도 비교시 거주대책에 대해 많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이었으며 대부분 참여한 경우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복지 서비스대책에 대해서는 도움 안되었다는 응답이 30% 이상이 나왔음.

□ 전반적인 복지욕구 조사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 가운데 앞으로 귀दै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대책에 대한 응답은 ‘기본생계대책’이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106명인 25.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9.3%인 81명이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대책’을, 18.6%인 78명이 ‘복지서비스대책’이라고 응답함. ‘의료보장대책’은 74명이 응답하여 17.5%를, ‘거주대책’은 47명인 11.1%를 차지하였음.

□ 경제위기 이후 중산·서민층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도시가계연보의 조세, 교육, 보건의료, 주거 등의 지출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대표적인 조세정책인 근로자 소득세 경감대책이 중산·서민층보다는 고소득층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역진성을 가진 간접세 비중이 경제위기 이후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에 우려되는 현상임.
 - 따라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조세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사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높아 중산·서민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교육과 같이 소득계층의 세대간 고착화를 발생시키는 제도에는 공적보장의 기능을 확충시켜야 하겠음.
- 저소득층의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소득대비 보건의료 및 주거비 지출비중은 중산·서민층 가계경제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하여 중산·서민층의 빈곤화로 직결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사회안전망제도와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건실화가 시급한 실정임.
- 현행 주요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점은 우선 현행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임.
- 특히 저소득층의 인지도는 중산층에 비해 더욱 낮다. 따라서 현행 생활안정대책이 중산·서민층 특히 서민층의 피부에 와 닿고,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재 설정되어야 할 것임.

6. 결 론

- 본 보고서에서는 건전한 소득계층 구조형성에 필요한 향후 생활안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음. 이와 더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 계층의 인적 특성, 생활실태, 복지욕구에 대한 심층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는 많이 있었으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집중적 조사는 없었음.
- 따라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변화를 추적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feedback을 통해 정책을 적절히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제 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각종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조기 구축하는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산·서민층은 교육·보건의료·주거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간 소득분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산·서민층의 소득은 하향한 데 비해 상위층의 소득은 상승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대빈곤층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계속해서 소득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절대빈곤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했으나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한 상태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건전한 소득계층 구조형성에 필요한 향후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 발생 여부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소득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적용대상 측면에서 포괄적인 소득재분배 정책도구인 소득세의 누진구조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소득계층별 가계수지를 적자가구와 흑자가구로 구분하여 집단간 수지의 절대규모, 격차와 분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산·서민층이 다

른 계층과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그리고 가계수지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항목별로 구성의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생활안정대책이 중산·서민층의 생활실태에 뚜렷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연보」에 나타난 조세·교육·보건의료 등의 생활실태지표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화조사를 통해 현행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대책, 기본생계대책, 의료보장대책, 거주대책 및 복지서비스대책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우리나라 중산·서민층의 실태와 정부 대책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먼저, 류상영·강석훈의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1999)은 최근의 중산층 약화 실태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중간값(median) 소득을 기준으로 50~150%의 계층을 중산층으로 간주한 이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하여 건전한 수요기반 및 안정적 세수원으로서의 중산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전후한 한국 중산층의 변화실태를 보면 중산층의 비중은 92년 70.58%에서 98년 3/4분기에 64.06%로 축소되었고, 경제위기의 파급효과가 본격화된 98년 1/4분기부터 중간값 소득의 감소율이 평균소득의 감소율보다 커져 중산층의 축소와 형평성의 악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IMF 이후 중산층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중산층은 경제위기에 매우 취약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에서는 설명한다. 즉 중산층의 경우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2%로 상류층

(53.1%)과 하류층(42.0%)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실직에 의한 소득감소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한 중산층은 소득대비 순저축액 비중이 37.7%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전소득의 절대액과 연간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재산소득 비중도 상류층과 하류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부는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고통을 치유할 목적으로 1999년에 중산층과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대책은 근로자 세금감면과 재산증식 기회 확대 및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이지만 인플레이와 재정적자 가중에 대한 우려가 있고 중산층 육성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미흡한 채 단기 직접지원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산층을 육성할 것 인지와 어느 정도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의 선택과 국민적 합의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실업률 감축과 조세환경 개선을 중산층 육성정책의 기본조건으로 내세우며 조세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산층 정책의 세 가지 축으로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조세환경 개선은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중산층의 근로의욕 고취에 효과적이며, 일자리 창출은 실업을 막아 중산층의 소득감소 예방은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은 빈곤층으로 탈락한 중산층에게 재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홍성민·민주홍의 「IMF시대의 중산층 약화실태 및 재구축 방안」(1999)에서는 중산계층은 경제유지의 핵심 주체로서 내구재 소비의 주축, 사회 안정의 버팀목, 국민 생활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경제 제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중산층 재구축 및 신중산층 양성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약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불안 및 내구재 수요 기반 약화를 유발

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중산층의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변화의 원인 분석 및 대안의 모색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의 중산층 분류는 기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10분위 중 4~7분위 소득계층 가운데 월 175~395만원 계층을 중산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IMF 이후 대체로 안정적이던 소득비중 분포가 98년에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소득비중 감소와 고소득층의 소득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중산층 가구 비중이 97년 52.3%에서 98년 45.8%로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비중은 38.7%에서 47.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산층 약화의 원인으로는 노동수요 급감, 중산층 경쟁력의 취약, 부의 감소 등을 꼽고 있다. 즉 노동수요 급감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 고용불안감 심화, 임금 하락이 나타나 중산층 약화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중산층의 경쟁력이 취약해 고용조정 주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산층 약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산층의 약화가 장기적으로 지속·심화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사회통합력 저해, 내수 침체 지속, 사회구조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산층 재구축을 위한 정부정책방향으로 고용확대와 신규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등의 고용기반 확대, 직업안정망 확충 등의 경쟁기반확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 등 안정기반강화, 생활비용 부담 완화 등 소득기반 강화와 조세부담 완화, 공공기관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과 중형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쟁기반 강화의 유인체계 마련 등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유경준·김대일의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2002)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포의 현황과 소득 변동 및 이동성, 빈곤의 문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산층의 감소와 소득분포의 양극화 현상은 확인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그 가능성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소득분포의 양상과 시계열 변화 추이에 있어서, 평균적인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근로소득의 불평등도가 곧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시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성과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득분배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바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취업을 통해 소득의 원천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심화되고 있고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노동수요의 양극화 양상을 고려할 때 소득분배구조는 단기간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역전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의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분배 정책 시행 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노동시장의 성과 제고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재분배 정책이 노동시장 성과를 오히려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재분배정책을 시혜 차원이 아닌 근로복지(workfare)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는, 재분배 정책의 대상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개인과 가구의 특성별로 재분배 정책에 대응한 선택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소득분포와 소득 계층의 변화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취업이 매우 중요한 소득향상 요인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제 2 장 중산·서민층의 시장소득의 변화: 시계열분석

우리사회는 1997년 말 발생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취약 계층을 소득상실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소득분배가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줄어들고 빈곤층과 고소득층이 늘어나는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 발생 여부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소득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적용대상 측면에서 사회보장정책보다 포괄적인 소득재분배 정책도구인 소득세의 누진구조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우리나라 가구의 대표성 측면에서는 1인 가구, 농어촌 가구, 비근로자 가구를 포함하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가 있는 하나, 이 자료는 5년을 주기로 조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은 다소 떨어지나 연도별로 조사가 되는 도시간계조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방법은 소득을 5분위나 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직 중산서민층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중산서민층의 소득비중, 소득구조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계층을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네 개의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석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시간계조사에 나타난 소득구성항목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간계조사 상의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경상소득은 다시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

득,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및 기타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등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1차 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 적용대상확대 및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보험제도를 강화하였으며, 2차 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들이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안전망의 기능은 소득의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이전소득으로 나타나는 바, 시장소득에 이전소득을 더한 경상소득의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인 경우에 사회안전망의 역할은 주로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에 따른 중산서민층과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의 누진성강화는 시장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과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하여, 가급적이면 소득세의 누진성으로 생산활동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시장소득을 생산활동에 기반한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과 재산소득을 구분하여 이들의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 어느 소득의 변화에 더 기인하고 있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소득과 관련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앞서 외환위기 전과 그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에는 6.8%의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성장률이 5.0%로 하락하였으며,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6.7%로 하락하여 우리 국민이 경제위기로 겪었던 혼란과 어려움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 이후 우리 경제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과 이에 따른 어려움을 인내한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바탕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 1999년에는 10.9%, 2000년에는 9.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세계경제의 경기둔화로 경제성장률이 3.1%로 하락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조금 반등하여 6.3%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2003년도에는 신용위기, 시중자금의 부동화, 부동산 투기 확산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어 경제위기 이후 최고의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

<표 2-1>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성장률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6.8	5.0	-6.7	10.9	9.3	3.1	6.3

자료: 한국은행 '국내 주요경제지표' 인터넷 자료

제 1 절 연도별 중위소득 수준 변화

도시가계조사 상에 나타난 시장소득, 경상소득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명목 중위소득은 <표 2-2>에서와 같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명목중위소득은 경제위기 전인 1996년 1,700,000원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708,159원으로 미미하나마 증가한 후, 2000년 1,891,600원, 2002년 2,230,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명목중위소득은 경제위기 전인 1996년 1,742,950원에서 1998년 1,751,795원, 2000년 1,950,000원, 2002년 2,298,000원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명

목중위소득은 경제위기 전인 1996년 1,849,600원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815,000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 2,032,200원, 2002년 2,400,000원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명목소득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시장소득, 경상소득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도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으나,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비경상소득의 감소폭이 경상소득이나 시장소득의 증가폭보다 커 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결국 외환위기로 인한 중위소득의 감소는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및 기타비경상소득이 경기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2-2〉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기준별 중위소득(명목)

(단위: 원)

구 분	1996	1998	2000	2002
시장소득	1,700,000	1,708,159	1,891,600	2,230,000
경상소득	1,742,950	1,751,795	1,950,000	2,298,000
소 득	1,849,600	1,815,000	2,032,200	2,400,000

자료: 『도시경제조사』 각 연도

그러나 이러한 연도별 중위소득변화는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변화이므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변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199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실질중위소득이 경제위기 전인 1996년 1,780,173원에서 경제위기 직후에는 1998년 1,611,901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 1,862,695원, 2002년 2,110,818원으로 6.2% 증가하였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질 중위소득은 경제위기 전인 1996년 1,677,526원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555,768원으로 감소한 후, 2000년 1,787,351원으로 증가한 후, 2002년 2,021,108원으로 증가하였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질중위소득은 경제위기 전인 1996년 1,636,189원에서 1998년 1,517,015원으로 감소한 후, 2000년 1,733,822원으로 증가한 후, 2002년에는 1,961,302원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중위소득은 명목중위소득의 경우와는 달리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감소하였다가 2000년부터 증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3〉 경제위기 전후의 소득기준별 중위소득(199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원)

구 분	1996	1998	2000	2002
시장소득	1,636,189	1,517,015	1,733,822	1,961,302
경상소득	1,677,526	1,555,768	1,787,351	2,021,108
소 득	1,780,173	1,611,901	1,862,695	2,110,818

자료: 『도시가계조사』. 각 연도

제 2 절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 시장소득기준 소득계층 구성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계층 생산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4계층으로 구분한다. 시장소득의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을 한계계층, 50~100% 미만을 서민층, 100~150% 미만을 중산층, 그리고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한다. 먼저 각 소득계층의 구성비의 크기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전후기간인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동안 서민층이 35.3~3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산층 26.5~27.2%, 고소득층 22.9%~23.6%,

한계계층이 11.7%~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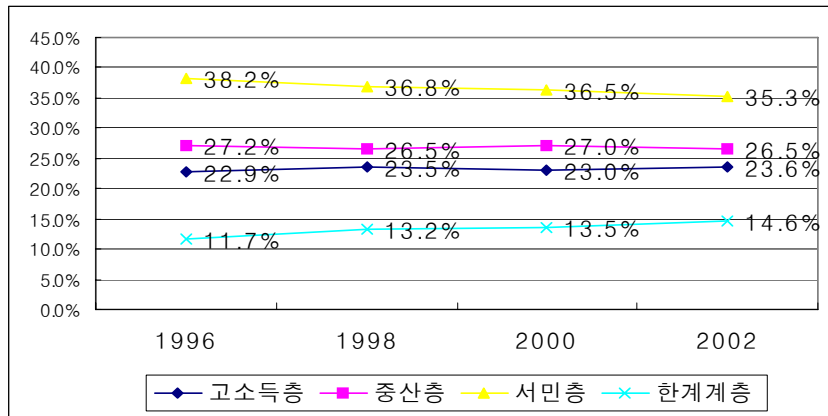
각 소득계층의 구성비를 연도별 변화로 살펴보면 [그림 2-1]에서와 같이 중산층은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 27.2%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26.5%로 0.7% 포인트 감소한 후 경제위기의 극복에 따라 2000년도에는 27.0%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시작된 경기침체로 경제위기 직후 수준인 26.5%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경우는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에는 22.9%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23.5%로 증가하고 경제회복기인 2000년도에는 23.0%로 감소하고 2002년도에는 23.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변화는 중산층이 감소할 때 고소득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증가할 때 고소득층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위기 전부터 경제위기 이후의 기간동안 경기변동에 따라 소득계층의 변화가 이들 두 계층 간의 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계층 변화를 살펴보면 서민층은 1996년 38.27%에서 1998년 36.8%, 2000년 36.5%, 그리고 2002년 35.3%로 감소한 반면, 한계계층은 동 기간동안 11.7%에서 출발하여 13.2%, 13.5%, 14.6%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위기이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이 점점 한계계층으로 편입되고 있다.¹⁾

중산층과 한계계층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구성된 중위소득 이상계층과 서민층과 한계계층으로 구성된 중위소득 미만계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위소득 이상계층인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구성비 변화는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경우에는 고소득계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감소하고, 경기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층이 감소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민층과 한계

1)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계층의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경우 중위소득 이상의 계층과 이하의 계층의 합은 구조적으로 50%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 중산층이상과 이하 계층간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

계층의 경우는 경제위기 이후 한계계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서민층이 지속적으로 한계계층에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서민층이 중산층보다 경제위기와 같은 큰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서민층은 부정적인 외부충격이 있는 경우, 그 외부충격이 사라진 후에도 외부충격으로 인한 타격을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 비중 변화



자료: 『도시가계조사』, 각 연도.

한편 이러한 구성비의 변화는 각 계층의 구성비 변화만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것도 중위소득 이상계층과 이하계층 내의 변화만을 살펴볼 수 있어 각 계층의 소득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파악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득계층의 질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고소득층의 평균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타 소득계층의 평균시장소득의 상대비율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산층, 서민층 및 한계계층의 고소득층에 대한 연도별 상대소득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년도의 전체 평균시장소득과 각 계층의 명목평균시장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 2-4>와 같다. 명목전체평균소득은 1996년 1,936,695원에서 1998년 1,952,760원, 2000년에는 2,151,319원, 2002년에는 2,559,682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각 소득계층별 명목소득은 한계계층을 제외하고는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계계층은 명목평균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 명목평균소득이 567,636원으로 1996년에 비하여 19,831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로 한계계층의 어려움이 가장 컸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평균시장소득(시장소득기준)

(단위: 원)

구 분	1996	1998	2000	2002
고소득층	3,561,576	3,600,935	4,002,707	4,770,323
중산층	2,073,210	2,091,480	2,316,481	2,731,665
서민층	1,281,228	1,296,222	1,427,480	1,692,057
한계계층	587,467	567,636	628,016	770,614
전체평균	1,936,695	1,952,760	2,151,319	2,559,682

자료: 『도시경제조사』, 각 연도

그러나 위와 같은 명목소득의 변화는 물가상승률이 포함되어 있고, 소득계층 간의 상대적인 소득의 질적 변화를 쉽게 알 수 없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명목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계층의 상대소득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상대소득비율은 1996년 이후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산층은 1996년 58.2% 수준에서 2002년 57.3%수준으로 0.9% 포인트 감소하였고, 서민층은 동 기간동안 36.0%에서 35.5%로 0.5% 포인트 감소하여 중산층의 상대소득비율의 감소폭이 0.4% 포인트 크다. 한계계층의 경우에도 1996년의 16.5%에서 2002년 16.2%로 0.3%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타 계층과는 달리 1998년에 15.8%, 2000년 15.7%로 1996년에 비하여 0.8% 포인트 감소한

후 2002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경제위기로 한계계층의 소득감소폭이 제일 컸으나, 2002년도의 상대소득비율의 상승은 정부의 한계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의 결과로 생각된다.

〈표 2-5〉 고소득층 기준 평균소득 상대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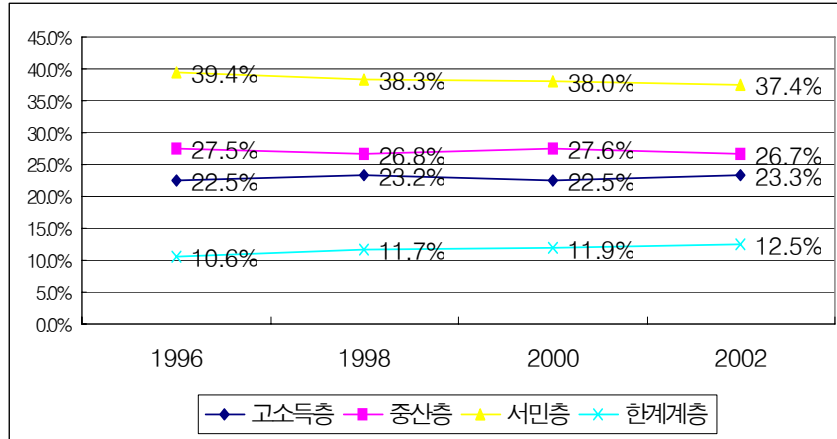
구 분	1996	1998	2000	2002
고소득층	100.0	100.0	100.0	100.0
중산층	58.2	58.1	57.9	57.3
서민층	36.0	36.0	35.7	35.5
한계계층	16.5	15.8	15.7	16.2

자료: 『도시가계조사』, 각 연도

제 3 절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경상소득기준 소득계층 구성비의 변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 경상소득(시장소득+이전소득)의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한계계층, 서민층, 중산층, 그리고 고소득층의 연도별 분포변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각 소득계층의 연도별 비중변화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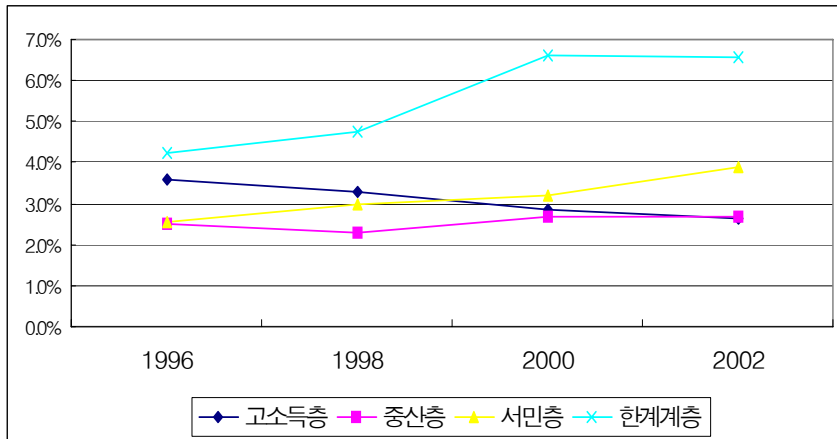
자료: 도시가계조사, 각 연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도별 중산층 비중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 27.5%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 보다 0.3% 포인트 증가하고,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도 26.8%로 0.3% 포인트 증가하며, 경제위기 극복시점인 2000년도에는 27.6%로 0.6% 증가하고 2002년도에는 26.7%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0.2%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리고 서민층의 경우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96년 39.4% 수준으로 1.2% 포인트 증가하고, 1998년에는 38.3%로 1.5% 포인트 증가하며, 2000년도에도 38.0%로 1.5% 포인트 증가하고 2002년도에는 37.4%로 1.3%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처럼 이전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층의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서민층의 증가폭이 중산층의 증가폭보다 크다. 그리고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2002년도의 한계계층 비중을 1996년도의 비중과 비교하면 2.9% 포인트 증가하고, 고소득층은 0.7%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전자는 1.9% 포인트 증가하고, 후자는 0.8% 포인트 증가하여 한

계계층은 그 폭이 줄어들었으나 후자는 늘어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보장정책의 결과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보장정책이 한계계층을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2-3]에서와 같이 경상소득대비 이전소득 비중의 연도별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고소득층의 이전소득비중은 1996년 3.6% 수준에서 2002년에는 2.6%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소득계층에서는 이전소득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계계층은 1996년 4.2%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4.8%수준으로 증가하고 2000년에는 6.6%수준으로 1.8% 포인트 증가한 후 2002년에도 6.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3] 경상소득대비 이전소득 비중 변화



자료: 도시가계조사, 각 연도

제 4 절 소득구조분석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 소득계층의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표 2-6>에서와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을 합한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이 모든 소득

계층에서 시장소득의 96.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의 소득계층별 크기는 서민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산층, 한계계층, 고소득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의 크기 순과는 반대로 고소득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계계층, 중산층, 서민층 순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각 소득계층의 생산활동 소득비중의 연도별 변화는 고소득층은 1996년 96.4%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2년도에는 97.7% 수준이 되었으며 중산층은 동 기간동안 98.1%에서 98.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서민층은 98.6%에서 98.8%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계계층도 98.0%에서 98.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표 2-6〉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비중(시장소득기준)

(단위: %)

구 분	1996	1998	2000	2002
고소득층	96.4	96.8	97.4	97.7
중산층	98.1	98.3	98.6	98.4
서민층	98.6	98.8	98.8	98.8
한계계층	98.0	98.3	98.2	98.2

자료: 도시가계조사, 각 연도

모든 소득계층의 연도별생산활동 소득비중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은 <표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소득의 비중 증가보다는 사업 및 부업 소득비중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즉 고소득층은 사업 및 부업소득이 1996년 5.0%에서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5.6% 수준이 되었다가 2002년에는 5.1%로 감소하였으며 중

2)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전 기간동안 한계계층의 재산소득 비중이 중산층이나 서민층 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경제위기 전인 1996년도에 나타났던 사실로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계층의 양극화와는 상관없는 현상이긴 하나 한계계층의 경우 재산의 보유비중이 중산층이나 서민층보다 낮고 따라서 재산소득도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산층은 1996년 3.6%에서 1998년 4.0%로, 2000년 4.1%로, 2002년 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서민층의 경우에도 1996년 2.0%에서, 1998년 2.4%로, 2000년 3.1%로 2002년 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한계계층은 1996년 1.5%에서 1998년에는 2.9%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2000년도에도 3.4%로 증가하였다가 2002년에는 2.8%로 감소하였다.

<표 2-7> 사업 및 부업 소득비중 변화

(단위: %)

구 분	1996	1998	2000	2002
고소득층	5.0	5.6	5.6	5.1
중산층	3.6	4.0	4.1	4.7
서민층	2.0	2.4	3.1	3.4
한계계층	1.5	2.9	3.4	2.8

자료: 도시가계조사, 각 연도

앞서 시장소득의 소득계층간 질적인 변화를 시장소득의 소득계층의 상대소득비율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는 시장소득의 질적 변화의 구조적 원인을 시장소득의 구성요소의 상대적 비율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중산층과 서민층의 고소득층대비 상대소득비율은 <표 2-8>에서와 같이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 및 부업소득의 상대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소득의 상대비율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감소하였다가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산층, 서민층 및 한계계층의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의 원인이 근로소득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소득계층은 재산소득의 경우 상대비율이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어 재산소득이 시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소득수준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인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경우,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분보다는 재산소득부분에 대한 누진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고소득층에 누진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표 2-8〉 고소득층 대비 상대소득 비율

(단위: %)

구 분		1996	1998	2000	2002
근로소득	중산층	60.2	60.1	59.6	57.9
	서민층	38.0	38.1	37.1	36.5
	한계계층	17.4	16.5	16.2	16.6
사업 및 부업소득	중산층	41.8	41.6	42.3	52.8
	서민층	14.4	15.4	20.1	23.2
	한계계층	5.0	8.1	9.5	8.7
재산소득	중산층	30.7	30.5	30.5	40.7
	서민층	14.0	13.6	16.8	19.6
	한계계층	9.0	8.1	10.7	13.1

자료: 도시가계조사, 각 연도

제 5 절 정책 시사점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시장소득의 변화분석을 통하여 소득분배가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도시가계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에 있어 중위소득 이상계층과 중위소득 미만계층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위소득 이상계층에서는 경제위기와 같은 경기침체의 경우에는 중산층이 감소하고, 경기가 호전되는

시기에는 중산층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민층의 경우는 경제 위기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민층이 지속적으로 한계계층에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계층 양극화의 소득계층간 차이는 서민층이 중산층보다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소득구조를 갖고 있으며, 외부충격이 사라진 후에도 외부충격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산층이하 소득계층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소득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 소득계층의 상대소득 비율을 경제위기 전인 1996년과 2002년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중산층은 0.9% 포인트 감소하였고, 서민층은 0.5%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한계계층은 0.3% 포인트 감소하여 중산층이 감소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서민층, 한계계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감소폭의 크기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정책의 결과로 생각된다.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의 결과인 이전소득을 시장소득에 포함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민층과 중산층의 비중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증가하여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소득계층의 양극화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서민층의 증가폭이 중산층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한계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경상소득대비 이전소득 비중의 크기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이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어 중산서민층의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도구인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소득계층의 소득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소득층의 시장소득대비 근로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타 소득계층의 고소득층대비 근로소득의 상대소득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의 누진율의 강화가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고소득층의 재산소득비중이 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그 차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재산소득의 상대비율이 근로소득이나 사업 및 부업소득보다는 매우 낮아 재산소득에 대한 누진율을 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제 3 장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생활실태분석

제 1 절 소득분위별 도시근로자가구의 분포현황

1. 소득계층별 점유비중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위를 한계계층,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별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중산·서민층이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계층에 대한 엄격한 정의는 지금까지 내려진 적이 없다. 소득계층을 10분위 또는 5분위로 나누어서 분위별로 분석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과연 중산·서민층이 소득계층 중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 집필진이 논의 끝에 합의한 수준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소득분위를 4개로 구분해 보았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소득계층은 공적부조수급계층 또는 이들과 유사한 생활수준에 있는 한계계층으로 보았고, 중위소득의 50% 이상에서 100% 미만인 계층은 서민층으로, 중위소득 100% 이상 150% 미만인 계층을 중산계층으로, 그리고 끝으로 중위소득 150% 이상인 계층을 고소득계층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의 목적은 계층별 가계수지를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로 구분하여 집단간 수지의 절대규모, 격차와 분포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중산·서민층이 다른 계층과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그리고 가계수지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소비항목별로 구성의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2002년도 『도시가계조사』이며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가구(2인가구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득과 소비지출관련 모든 데이터가 제공되는 관계로 도시근로자가구에

분석을 국한하는 경우, 분석대상 가구의 수는 33,146가구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소득기준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소득을 사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에서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자산감소와 부채증가로 구성된 기타수입은 제외된 금액이다. 총수입은 소득에 자산감소와 부채증가가 합친 금액이다.

경상소득에는 이전소득(공적보조금, 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생활비보조)이 포함된 금액이며,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기타 비경상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기준소득을 총수입보다는 적고 경상소득보다는 큰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계계층(1 계층), 서민계층(2 계층), 중산그룹(3 계층), 고소득계층(4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층의 구분은 소득의 중위소득인 240만원을 기준으로 50% 미만을 1계층, 50% 이상 100% 미만을 2계층, 100% 이상 150% 미만을 3계층, 150% 이상을 4계층으로 정하였다. 참고로 2002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2,811,291원 이었다. 가장 낮은 소득계층인 한계계층에는 전체 가구의 12.2%가 해당되었고 이들 가구의 평균총소득은 869,275원 그리고 평균경상소득은 837,043원으로 조사되었다.

서민계층에 해당되는 2계층은 가구점유비중이 가장 높아 37.8%였고, 이들 가구의 평균총소득은 1,809,407원, 평균경상소득은 1,753,923원 이었다. 서민계층 중 공적보조를 받는 가구는 685가구로 한계계층의 17%를 차지하였다. 서민계층 다음으로 점유비중이 높은 중산계층은 점유비중이 26.8%이고 평균총소득은 2,926,626원, 평균경상소득은 2,832,927원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고소득계층은 점유비중이 3번째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총소득은 5,334,804원, 평균경상소득은 4,819,984원이었다.

<표 3-1> 소득계층분류1

(단위: 개, %, 원)

구 분	대상가구수	비중	소득	경상소득(평균)
4 계층(고소득)	7,683	23.2	5,334,804	4,819,984
3 계층(중산)	8,891	26.8	2,926,626	2,832,927
2 계층(서민)	12,519	37.8	1,809,407	1,753,923
1 계층(한계)	4,053	12.2	869,275	837,043

소득분위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OECD기준 균등화지수³⁾를 사용하여 계층구분을 하는 경우 계층간 점유비중은 아래와 같다. 균등화지수를 이용한 중위소득은 1,245,320원이며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으로 계층을 구분한 것이다.

<표 3-2> 소득계층분류2

(단위: 개, %)

구 분	대상가구수	비중
4 계층(고소득)	7,387	22.3
3 계층(중산)	9,186	27.7
2 계층(서민)	13,045	39.4
1 계층(한계)	3,528	10.6

<표 3-1>의 소득계층구분과 비교하여 <표 3-2>에서는 1계층의 비중은 감소하고 2계층은 증가, 3계층 증가, 그리고 4계층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균

3) 균등화소득 = $\frac{\text{가구소득}}{(\text{가구원수})^{1/2}}$

등화소득기준이 아닌 일반소득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한 계층기준을 이용하였다.

제 2 절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1. 소득과 가계지출에 의한 가계수지(가계수지=소득-가계지출)

위 <표 3-2>에서 분류한 소득계층별로 소득에서 가계지출을 감한 후 차감액이 양수이면 흑자가구로 음수이면 적자가구로 분류하였다. 소득은 경상소득에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기타 비경상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총수입은 소득에 기타수입을 합한 금액이며 기타수입에는 자산감소와 부채증가가 포함된다.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소비지출은 각종 조세지출, 각종 보험료지출, 이자 및 각종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지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기타지출로 자산증가, 저금, 유가증권구입 등이 있다. 아래 <표 3-3>은 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를 소득등급별로 구분해 본 것이다.

소득등급이 내려갈수록 적자가구의 비중이 커지며, 4계층의 적자가구비중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9.5%인데 반해 최저등급인 한계계층은 52.7%로 적자가구의 비중이 흑자가구의 비중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기준을 소득이 아닌 경상소득으로 정하는 경우, 각 계층별 적자가구의 비중은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계층은 9.5%에서 14.4%로, 제3계층은 15.5%에서 18.8%, 제2계층은 26.0%에서 29.7%, 그리고 제1계층은 52.7%에서 55.8%로 점유 비중이 늘어났다. 거주지별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제4계층 중 적자가구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24.8%, 제3계층은 20.2%, 제2계층은 21.7%, 제1계층은 19.6%로 조사되었다. 이 비중은 계층별 서울거주 비중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흑자가구와 적자가구간 서울과 기타도시의 거주지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소득계층별 적자·흑자가구 분류1 (소득-가계지출)

(단위: %)

구 분		대상가구수	비중
4계층	적자가구	726	9.5
	비적자가구	6,957	90.5
	계	7,683	
3계층	적자가구	1,375	15.5
	비적자가구	7,516	84.5
	계	8,891	
2계층	적자가구	3,257	26.0
	비적자가구	9,262	74.0
	계	12,519	
1계층	적자가구	2,137	52.7
	비적자가구	1,916	47.3
	계	4,053	

2. 자산감소와 부채증가를 감안한 가계수지(가계수지=소득+자산감소-부채증가-가계지출)

위 <표 3-3>에서는 소득에서 자산감소 즉, 저축찾은 금액, 보험 탄 금액, 계 탄 금액, 유가증권매각, 부동산매각, 기타재산매각, 빌려준 돈 받음, 기타자산감소 등의 항목과 부채증가 즉, 주택융자, 기타융자, 월부, 기타부채 등의 항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금액이 소득에 합쳐지는 경우 적자가구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 게 된다. 소득에 자산감소로 인한 소득을 합산한 후 부채증가를 마이너스항목으로 합산한 후 가계지출을 빼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를 재구성해보았다.

〈표 3-4〉 소득계층별 적자·흑자가구 분류2 (소득+자산감소-부채증가 -가계지출)
(단위: %)

구 분		대상가구수	비중
4계층	적자가구	210(240)	2.7(3.0)
	비적자가구	7,473(7,680)	97.3(97.0)
	계	7,683(7,920)	
3계층	적자가구	313(405)	3.5(4.4)
	비적자가구	8,578(8,695)	96.5(95.6)
	계	8,891(9,100)	
2계층	적자가구	892(1,077)	7.1(8.3)
	비적자가구	11,627(11,829)	92.9(91.7)
	계	12,519(12,906)	
1계층	적자가구	783(1,002)	19.3(24.3)
	비적자가구	3,270(3,112)	80.7(75.7)
	계	4,053(4,114)	

주: ()안은 2001년도 통계임.

<표 3-4>에서의 적자가구는 경상소득과 재산감소로 인한 소득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소비를 한 가구들로 적자금액은 순부채를 의미하는 것이다. 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수지를 계산한 결과와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 3-3>은 일상적인 소득 보다 많이 지출을 하여 발생한 적자를 의미하고 <표 3-4>는 일상적인 소득과 재산을 처분한 소득 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여 발생한 적자이다. 경상적인 소득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표 3-3>상의 적자가구 상당수가 <표 3-4>의 적자가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 3 절 소득계층별 소득, 지출수준비교

소득계층별로 적자의 원인이 소득수준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인지 소득보다는 지출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계층별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평균소득과 평균지출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소득을 살펴보면 동일 계층 내에서도 적자가구에 비해 흑자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제1계층의 경우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비적자가구가 적자가구에 비해 14만 5천원 높다.

반면에 가계지출은 적자가구가 비적자가구에 비해 62만 9천원 많음을 알 수 있다. 소득 1계층의 적자가구의 적자원인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비적자가구보다 많은 소비를 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민층인 제2계층의 경우, 비적자가구의 소득이 적자가구에 비해 7만 2천원 높다. 그러나 가계지출은 적자가구가 비적자가구에 비해 117만 8천원 많다. 중산층인 제3계층은 비적자가구의 소득이 3만 6천원 많으나 가계지출은 217만 3천원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층인 제4계층은 비적자가구의 소득이 40만 5천원 높고 가계지출은 400만원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5>가 시사하는 바는 적자가구는 동일 소득계층내에서도 소득이 비적자가구에 비해 낮고 가계지출은 소득의 격차 보다 훨씬 높은 폭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적자의 원인은 소득수준보다는 소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소득계층별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소비지출액

(단위: 원)

구 분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소득	804,431	941,598	1,756,433	1,828,035	2,896,504	2,932,137	4,968,317	5,373,048
경상소득	768,146	913,885	1,688,950	1,776,771	2,753,278	2,847,498	4,314,516	4,872,732
근로소득	694,110	807,852	1,553,705	1,629,139	2,490,518	2,595,163	3,846,256	4,395,161
가계지출	1,335,427	706,760	2,477,574	1,299,428	4,107,561	1,934,546	7,090,116	3,082,122

제 4 절 가계수지별 소비지출액비교

소득계층별로 소비항목별 비중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다.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적자가구와 흑자가구별로 소비지출의 절대금액을 비교해 보았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적자가구는 흑자가구에 비해 모든 항목에 대해 소비지출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식료품의 경우, 적자가구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1.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구집기 사용품도 1, 2, 3계층은 약 3배, 제4계층은 5배의 차이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는 2~3배, 교육은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6〉 소득계층별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소비비중내용

(단위: 원)

구 분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적자 가구	비적자 가구	적자 가구	비적자 가구	적자 가구	비적자 가구	적자가구	비적자 가구
식료품	336,797	244,022	496,667	385,346	624,563	499,795	739,522	622,158
주거	67,265	36,525	82,012	43,141	141,022	41,890	302,962	51,774
광열·수도	79,349	61,781	97,422	75,730	101,355	87,475	124,829	105,498
가구집기가사용품	41,049	13,963	91,689	29,523	168,406	51,240	532,036	105,450
피복 및 신발	65,141	28,109	117,157	60,438	183,410	96,026	316,893	162,303
보건의료	69,993	27,171	132,027	42,226	181,022	61,392	237,882	95,639
교육	110,214	31,832	289,186	95,226	570,681	165,784	901,004	268,207
교양 오락	48,723	17,808	120,693	39,984	237,262	67,611	354,499	124,328
교통통신	220,329	102,339	423,442	194,874	698,545	269,936	1,256,296	371,450
기타소비지출	173,002	91,732	366,028	197,713	575,060	310,745	1,113,158	541,775
비소비지출	123,560	51,473	261,246	135,221	626,229	282,648	1,211,033	633,535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적자가구의 적자의 원인은 소득보다는 지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2, 3계층에서는 식료품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4계층에서는 비소비지출이 19.9%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조세지출, 사회보험료, 지급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료품의 소비비중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 2계층은 식료품 다음으로 교통통신비가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3계층은 기타소비지출이, 제4계층은 식료품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소비지출에는 저축, 저축성보험료, 유가증권구입, 부동산구입, 빌려준 돈, 계 부은 금액, 부채상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비중은 낮지만 주거비와 광열·수도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비중이 낮아져 식료품과

유사한 추세를 갖고 있다. 교양·오락은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7〉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의 내용

(단위: %)

구 분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식료품	28.3	25.8	22.9	18.3
주거	5.1	3.3	2.5	2.2
광열·수도	6.8	5.1	3.9	3.1
가구집기사용품	2.7	2.9	3.1	4.2
피복 및 신발	4.6	4.7	4.8	5.1
보건의료	4.8	4.1	3.5	3.2
교육	7.1	9.1	10.1	9.5
교양 오락	3.3	3.8	4.1	4.2
교통통신	15.8	15.8	14.8	13.2
기타소비지출	12.9	15.0	15.5	17.2
비소비지출	8.6	10.5	14.9	19.9

아래 <표 3-8>은 소득계층별로 구분한 후, 계층 내에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를 분리하여 소비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것이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적자가구가 흑자가구에 비해 식료품의 소비비중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비의 경우에는 계층 1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에서 적자가구가 흑자가구보다 소비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광열·수도는 모든 계층에서 흑자가구가 비중이 더 높으며 가구집기 사용품은 적자가구가 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피복 및 신발은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보건의료비는 적자가구가 더 소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오락과

교통통신은 적자가구의 비중이 약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소비지출은 1, 2, 3 계층에서는 적자가구가 높으며 제4계층에서는 흑자가구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자가구가 흑자가구에 비해 소비를 눈에 띄게 많이 하는 항목은 교육으로 1계층의 경우 적자가구가 흑자가구에 비해 약 2배정도 더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8〉 소득계층별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소비비중내용

(단위: %)

구 분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식료품	25.3	34.7	20.1	29.8	15.2	25.9	10.4	20.2
주거	5.1	4.4	3.3	3.3	3.4	2.2	4.3	1.7
광열·수도	6.0	8.7	3.9	5.8	2.5	4.5	1.8	3.4
가구집기가 사용품	2.8	1.9	3.7	2.3	4.1	2.7	7.5	3.4
피복 및 신발	4.9	3.9	4.7	4.7	4.5	5.0	4.5	5.3
보건의료	5.3	3.9	5.3	3.3	4.4	3.2	3.4	3.1
교육	8.3	4.4	11.7	7.4	13.9	8.6	12.7	8.7
교양 오락	3.7	2.5	4.9	3.1	5.8	3.5	5.0	4.0
교통통신	16.5	14.5	17.1	15.0	17.0	14.0	17.7	12.1
기타소비지출	13.0	13.0	14.8	15.3	14.0	16.1	15.7	17.6
비소비지출	9.1	6.7	10.5	10.0	15.2	14.5	17.1	20.6

1. 거주지역과 소비지출항목구성비

도시가계조사상의 거주기준은 서울과 기타 도시로 구분된다. 전체 가구의 거주비중은 서울이 19.3% 기타 도시거주자가구가 80.7%로 조사되었다. 소득계층별로는 제4계층의 서울거주비중은 19.5%, 3계층은 19.1%, 2계층은 20%, 그리고 1계층은 16.7%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소비구성과 절대액이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본 글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 소비의 규모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소비구성상의 차이를 보기 위해 소득계층별, 적자가구와 흑자가구별 그리고 거주지역(서울, 기타 시)별로 가계지출구성항목의 비중을 비교해 보았다.

〈표 3-9〉 한계계층(제1계층)의 거주지역별 소비비중내용

(단위: %)

구 분	1 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식료품	28.0	28.3	35.5	35.5
주거	6.6	4.5	5.3	4.9
광열·수도	6.5	6.9	8.7	9.0
가구집기가사용품	3.2	2.9	1.8	1.9
피복 및 신발	4.9	4.9	4.1	3.8
보건의료	5.4	5.0	2.7	4.0
교육	6.5	7.6	4.1	3.9
교양 오락	4.2	3.1	2.3	2.4
교통통신	15.4	14.6	13.1	14.6
비소비지출	6.9	7.9	9.7	6.8

한계계층인 제1계층을 거주지 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서울거주가구와 기타시지역 거주가구간 소비비중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적자가구 중 서울거주가구의 소비비중이 높은 항목은 주거비, 가구집기,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비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차이는 유의한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적자가구 중 서울거주가구의 소비비중이 높은 항목은 주거, 피복

및 신발, 교육, 비소비지출 등으로 조사되어 적자가구와 비적자가구간 거주지역에 따른 비중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민층인 제2계층에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소비비중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거주 적자가구의 경우, 식료품, 주거비, 가구집기,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비의 지출비중이 타도시 거주가구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적자가구의 경우, 서울거주가구의 지출항목 중 식료품, 주거비, 그리고 교양·오락 항목만이 조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계계층과 서민층에서는 서울거주가구의 주거비가 적자가구와 비적자가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 서민층(제2계층)의 거주지역별 소비비중내용

(단위: %)

구 분	2 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식료품	23.1	22.1	31.5	30.2
주거	4.3	2.9	4.0	3.2
광열·수도	4.4	4.5	5.8	6.1
가구집기·가사용품	3.9	3.4	2.1	2.2
피복 및 신발	4.4	5.2	4.4	4.6
보건의료	5.7	5.2	2.9	3.2
교육	9.3	11.0	6.5	6.8
교양·오락	5.5	4.5	3.1	2.9
교통통신	14.3	14.0	14.4	15.3
비소비지출	8.5	10.9	9.2	10.4

중산층인 제3계층은 적자가구의 경우, 서울지역거주가구가 타 도시거주가구

에 비해 주거비, 광열·수도,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항목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적자가구의 경우,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교양·오락 항목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 중산층(제3계층)의 거주지역별 소비비중내용

(단위: %)

구 분	3 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식료품	17.8	17.3	27.7	26.4
주거	3.1	3.0	2.7	2.0
광열·수도	3.0	2.7	4.9	4.6
가구집기가사용품	3.5	4.4	2.5	2.5
피복 및 신발	5.3	5.0	4.8	4.8
보건의료	4.8	4.4	2.8	3.1
교육	15.4	13.5	6.8	8.3
교양 오락	5.8	6.2	3.9	3.1
교통통신	11.0	13.1	14.0	14.2
비소비지출	13.6	14.9	12.4	14.9

고소득계층인 제4계층에서는 적자가구의 경우, 서울거주가가 타 도시거주 가구에 비해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집기, 교육, 교양·오락 항목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적자가구의 경우,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양·오락 항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2〉 고소득층(제4계층)의 거주지역별 소비비중내용

(단위: %)

구 분	4 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식료품	13.9	11.9	23.3	21.3
주거	2.9	4.6	1.9	1.6
광열·수도	2.3	2.0	3.8	3.6
가구집기가사용품	7.0	5.5	3.1	3.0
피복 및 신발	4.5	4.5	5.2	5.0
보건의료	3.3	4.1	3.2	2.8
교육	15.6	14.9	7.7	8.4
교양 오락	6.9	4.5	4.2	3.5
교통통신	10.1	14.5	12.6	12.6
비소비지출	17.1	18.9	17.0	21.2

제 5 절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총수입구성비 비교

적자가구가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총수입의 구성비를 분석해 보았다. 총수입은 자산감소와 부채증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포괄적인 항목이다. 우선 가계수지를 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총수입의 구성비를 비교해 보았다. <표 3-5>에서 알 수 있듯이 적자가구는 총수입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흑자가구에 비해 낮고 자산감소소득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적자가구의 소비는 경상소득과 함께 자산감소로 인한 기타소득을 고려하여 소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가구가 도시근로자가구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소득원까지 감안한 소비행위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도와 비교해 보면, 2002년은 2001년에 비해 총수입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산감소로 인한 소득의 비중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채비중은 3계층과 4계층에서는 증가하였고 1계층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산소득은 적자가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비적자가구는 동일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 및 부업 소득은 1계층과 3계층은 감소하였고, 2계층에서는 적자가구는 감소하였고 비적자가구는 증가하였다. 4계층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비해 2002년도에 도시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의 비중은 줄고 자산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3〉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총수입구성비중(2002)

(단위: %)

구 분		총수입의 주요 항목비중				
		근로소득	사업·부업 소득	재산소득	부채	자산감소
4계층	적자가구	35.0	1.9	1.1	10.4	42.7
	비적자가구	52.7	3.1	1.2	3.9	30.2
3계층	적자가구	36.9	1.9	1.1	9.4	42.7
	비적자가구	54.6	2.9	0.8	3.2	29.5
2계층	적자가구	41.2	1.5	0.5	8.3	38.3
	비적자가구	57.1	2.3	7.0	2.6	24.6
1계층	적자가구	39.1	1.1	0.4	6.3	35.3
	비적자가구	57.8	1.7	0.9	1.3	15.7

〈표 3-14〉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총수입 구성비중(2001)

(단위: %)

구 분		총수입의 주요 항목비중				
		근로소득	사업·부업 소득	재산소득	부채	자산감소
4계층	적자가구	37.4	1.8	1.0	8.8	44.8
	비적자가구	59.1	3.1	1.4	3.3	29.9
3계층	적자가구	41.6	2.4	0.8	8.9	42.9
	비적자가구	60.4	3.2	0.8	3.0	28.6
2계층	적자가구	44.6	1.8	0.5	8.3	37.4
	비적자가구	62.8	2.0	7.0	2.3	23.5
1계층	적자가구	43.3	1.4	0.3	7.7	31.9
	비적자가구	67.0	1.8	1.3	1.5	14.1

제 6 절 계층별 가계수지의 절대수준비교

1. 소득과 가계지출 기준에 의한 가계수지비교(가계수지=소득-가계지출)

한계계층의 경우, 적자가구의 평균적자규모는 서울거주 가구보다 기타 시 거주가가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20,946원으로 기타 시는 -533,447원 약 4만 8천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적자가구의 흑자규모는 서울과 기타시 간에 약 7천원 정도로 기타시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5〉 한계계층(제1계층)의 적자·흑자규모(2002)

(단위: 원)

구 분	1 계층(한계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419	1,718	261	1,655
평균	-520,946	-533,447	228,509	235,836
표준편차	577,435	1,080,732	198,320	161,216

평균적으로 흑자가구는 적자가구의 적자금액의 4배 이상의 흑자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준편차를 통해 적자와 흑자금액의 분포를 알 수 있다. 적자가구 중 서울거주가의 표준편차는 577,435원으로 평균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이는 평균 주변에 많은 가구들이 군집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타 시 거주가는 표준편차가 평균의 약 2배로 서울지역거주가에 비해 넓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적자가구의 경우, 서울지역거주가의 표준편차는 기타 시 거주가의 표준편차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비적자가구의 흑자규모의 표준편차가 적자가구의 적자금액 표준편차 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자가

구와는 달리 비적자가구에서는 기타 시거주가구가 평균주위에 보다 많이 군집해 있음을 시사한다. 한계계층의 적자가구비중은 52.7%이고 서울거주 적자가구 수는 419가구로 서울거주가구의 61.6%를 차지한다. 한계계층의 경우 적자가구가 서울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의 한계계층 가계수지액과 비교해 보면 2002년에는 적자가구의 적자규모도 증가하였고 흑자가구의 흑자규모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02년에는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절대격차 또는 순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도 흑자와 적자규모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6〉 한계계층(제1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1)

(단위: 원)

구 분	1 계층(한계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350	1,888	296	1,580
평균	-487,701	-492,561	195,516	209,171
표준편차	579,278	676,279	166,422	151,724

서민계층인 제2계층의 경우, 기타 시 거주가구의 적자규모가 서울거주가구에 비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흑자가구의 경우에도 기타 시 거주가구의 흑자규모가 서울거주가구에 비해 약 5만원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 거주가구의 경우, 적자가구의 적자금액은 평균 -66만원인데 반해 흑자가구의 평균 흑자규모는 48만원으로 순격차는 100만원이상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시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순격차가 126만원으로 서울거주가구들에 비해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계층과 마찬가지로 서민계층의 적자가구의 적자구

모의 표준편차는 흑자규모의 편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대금액으로 계산할 때 적자의 규모는 흑자의 규모 보다 훨씬 크고 분포도 훨씬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제2계층의 적자가구비중은 28% 이고 서울지역거주자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26%로 제2계층에서는 서울과 기타 시·군 적자가구의 분포가 균등함을 보이고 있다.

제1계층보다는 덜 하지만 제2계층, 즉, 서민계층에서도 적자가구가 서울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순격차는 1계층 보다 더 벌어져서 서울거주자구의 경우 114만원, 기타 시·군 거주자구는 126만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3-17〉 서민계층(제2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2)

(단위: 원)

구 분	2 계층(서민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708	2,549	1,808	7,454
평균	-663,364	-737,189	486,286	538,872
표준편차	1,643,855	1,489,248	308,250	335,797

서민계층도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거주지를 불문하고 적자규모와 흑자규모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적자가구의 평균적자액이 2001년에는 -494,809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663,664원으로 무려 -16만원이 증가하였다. 비적자가구나 적자가구 중 기타 시·군 거주자구의 적자액과 흑자액 증가폭이 3~4만원 인 것에 비하면 비교가 된다.

2001년 적자가구의 경우, 서울거주자구의 적자금액이 -494,809원인 것에 비해 기타 시·군 지역 거주자구의 적자금액이 -704,053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준편차는 서울거주적자가구의 적자금액의 편차가 2002년에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표 3-18〉 서민계층(제2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1)

(단위: 원)

구 분	2 계층(서민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725	2,904	1,794	7,483
평균	-494,809	-704,053	456,018	484,245
표준편차	873,594	1,501,671	307,151	335,797

중산층인 제3계층에서는 다른 계층과는 달리 서울거주자구와 기타 시 거주자구간 적자금액과 흑자금액에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순격차는 서울거주자구의 경우 222만원으로 늘어났고 기타 시 거주자구의 경우 219만원으로 1, 2계층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계층이 올라갈수록 적자와 흑자간 순격차는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도 계층이 올라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제3계층의 경우 2계층과 비교해 볼 때 평균금액의 증가보다도 표준편차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계층별로 볼 때 흑자의 증가액 규모로 적자의 규모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제2계층은 1계층과 비교해서 기타시거주의 경우 적자규모는 20만원 늘어났고 흑자규모는 30만원 늘어났다. 서울거주자구는 적자금액이 14만원 증가하였고 흑자규모는 25만원 증가하였다. 제3계층은 2계층과 비교해 볼 때, 기타 시 거주자구의 경우, 적자규모는 47만원 증가하였고 흑자규모는 45만원, 서울 거주자구에서는 적자 55만원 흑자 53만원으로 적자와 흑자가 계층이 올라갈수록 절대액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산층인 제3계층에서는 서울거주비중이 19.1%인데 반해 서울 거주자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16.2%로 오히려 기타 시에 적자가구가 조금 더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9〉 중산층(제3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2)

(단위: 원)

구 분	3 계층(중산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278	1,097	1,428	6,088
평균	-1,217,383	-1,209,454	1,019,624	992,422
표준편차	2,498,785	2,448,891	506,371	525,034

중산층의 경우,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서울거주적자가구의 평균적자금액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기타 시 거주가구의 적자금액과 비적자가구의 흑자금액은 증가하였다. 표준편차도 서울거주 적자가구의 적자금액의 표준편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서울거주 적자가구의 적자금액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편차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0〉 중산층(제3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1)

(단위: 원)

구 분	3 계층(중산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316	1,152	1,538	6,094
평균	-1,496,646	-1,172,707	881,620	893,811
표준편차	3,113,896	2,401,590	472,915	479,558

고소득계층인 제4계층의 경우에도 기타 시 거주가구의 적자규모와 흑자규모가 서울 거주 가구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2, 3계층의 경우, 적자금액의 표준편차가 흑자금액의 표준편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으나 제4계층의 경우, 적자금액의 표준편차와 흑자금액의 표준편차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표 3-21〉 고소득계층(제4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2)

(단위: 원)

구 분	4 계층(고소득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180	546	1,319	5,638
평균	-1,969,058	-2,172,153	2,261,203	2,297,881
표준편차	3,885,845	3,708,359	3,263,532	2,836,668

그리고 고소득계층은 다른 계층과는 달리 흑자의 증가폭이 적자규모의 증가 보다 더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산층에 비해 서울거주가구의 적자증가액은 75만원이나 서울거주가구의 흑자증가규모는 124만원이었다. 또한 기타 시 거주가구의 적자증가규모는 96만원이나 흑자규모는 130만원으로 더 크다.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흑자의 규모가 더 커짐으로 인해 순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거주자비중은 19.5%이나 서울거주가구 중 적자가구비중은 12%로 오히려 기타 시 거주가구의 적자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서울에 흑자가구가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적자가구의 적자금액이 감소하였고 비적자가구의 흑자규모는 소폭 상승하였다.

표준편차는 적자가구의 적자금액의 편차는 감소하였고 비적자가구 중 서울거주가구의 편차는 감소하였으나 기타 시 거주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적자금액은 대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나 한계계층과 서민층의 적자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2〉 고소득계층(제4계층)의 거주지역별 적자·흑자규모(2001)

(단위: 원)

구 분	4 계층(고소득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163	629	1,388	5,740
평균	-2,165,174	-2,747,536	2,210,138	2,050,858
표준편차	3,302,435	5,207,050	6,782,702	2,571,910

2. 소득과 자산감소, 부채증가, 가계지출 기준에 의한 가계수지(가계수지=소득+자산감소-부채증가-가계지출)

가계수지를 자산감소와 부채증가까지 감안한 순개념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 계층별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가계수지금액을 비교해 보았다. 순개념 기준으로 적자가구란 소비는 순부채의 증가로 충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계층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일반가계수지(소득-가계지출)와 비교해 볼 때, 순가계수지 적자가구의 비중은 감소하나 가계수지적자액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자가구의 경우, 일반가계수지와 비교해서 서울거주적자가구의 적자액은 -25만원 증가하였고 기타 시 거주 적자가구는 -35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흑자가계의 수지도 서울거주가구의 경우 50만원, 기타 시 거주가구는 평균 30만원 증가하였다.

〈표 3-23〉 한계계층(제1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2)

(단위: 원)

구 분	1 계층(한계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132	651	548	2,722
평균	-755,166	-892,465	723,549	558,297
표준편차	1,606,927	2,821,241	2,231,902	1,150,285

서민층의 경우에도 순가계수지로 구분하는 경우, 일반가계수지에 비해 적자금액과 흑자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거주 적자가구의 경우, 적자액이 -100만원 더 많고, 기타 시는 -110만원, 흑자액은 서울 100만원, 기타 시 110만원으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순격차는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표 3-24〉 서민층(제2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2)

(단위: 원)

구 분	2 계층(서민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210	682	2,306	9,321
평균	-1,640,690	-1,842,651	1,546,066	1,423,996
표준편차	3,845,708	3,559,375	3,278,410	2,004,780

중산층의 경우에는 서울거주 적자가구의 경우, 적자금액이 -53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준은 고소득계층의 적자금액증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서울거주 중산층의 순적자 가구의 부채증가는 고소득층과 같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산층의 기타 시 거주 가구의 적자액증가는 -360만원

이고 흑자액 증가는 150만원과 160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중산층부터는 한계계층과 서민층과는 달리 적자금액의 증가가 흑자액의 증가보다 몇 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25〉 중산층(제3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2)
(단위: 원)

구 분	3 계층(중산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64	249	1,642	6,936
평균	-6,527,718	-4,869,985	2,533,488	2,625,819
표준편차	13,353,269	12,623,315	2,292,183	3,339,400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순가계수지의 경우, 적자액의 증가가 흑자액의 증가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구의 경우 약 530만원의 적자액증가를 보이고 흑자가구의 흑자액은 약 250만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6〉 고소득층(제4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2)
(단위: 원)

구 분	4 계층(고소득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74	136	1,425	6,048
평균	-7,396,566	-7,320,341	4,949,950	5,030,351
표준편차	12,929,744	9,231,176	5,877,524	7,184,627

3. 순적자, 순흑자규모의 추세

한계계층의 경우, 2002년과 2001년을 비교해 보면 서울거주 적자가구의 적자금액은 감소한 반면 기타 시 거주가구의 적자금액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흑자가구의 흑자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7〉 한계계층(제1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1)

(단위: 원)

구 분	1 계층(한계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177	825	469	2,643
평균	-1,303,451	-742,206	703,182	576,516
표준편차	3,609,561	1,595,389	3,841,308	2,093,670

서민층의 경우에는 적자가구의 순적자 규모가 모두 2002년에 각각 100만원, 30만원정도 감소하였고 순흑자 규모는 약 10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8〉 서민층(제2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1)

(단위: 원)

구 분	2 계층(서민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186	892	2,333	9,495
평균	-2,679,966	-2,105,963	1,433,726	1,329,166
표준편차	6,717,201	5,351,009	2,490,815	2,365,174

중산층에서는 적자금액과 흑자금액 모두 2002년에 전년에 비교해 증가하였다. 부채의 감소규모가 흑자액의 증가폭 보다 큼을 알 수 있다.

〈표 3-29〉 중산층(제3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1)
(단위: 원)

구 분	3 계층(중산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96	310	1,758	6,936
평균	-4,948,149	-4,073,163	2,470,964	2,402,344
표준편차	9,937,144	10,692,677	3,445,809	3,156,563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적자금액은 2002년에는 2001년 보다 감소하였고 흑자액은 증가하였다.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순격차가 2002년이 2001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과 2002년을 비교하는 경우, 중산층의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순가계수지의 격차는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의 순가계수지 격차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30〉 고소득층(제4계층)의 거주지역별 순적자·순흑자규모(2001)
(단위: 원)

구 분	4 계층(고소득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표본수	63	177	1,488	6,192
평균	-8,158,423	-7,414,897	4,647,040	4,627,278
표준편차	13,486,061	11,029,909	7,704,742	4,870,423

제 7 절 가구특성과 가계수지

1.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와 가계수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와 가계수지관계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았다. 종사상 지위는 크게 공무원,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 등 4개로 구분된다.

〈표 3-31〉 소득계층별 가구주종사상 지위와 가계수지

구 분	제1계층(한계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공무원	8(100.0)	0.2	7(87.5)	0.3	1(12.5)	0.1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584(100.0)	14.4	351(60.1)	16.4	233(39.9)	12.2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2,272(100.0)	56.1	1,197(52.7)	56.0	1,075(47.3)	56.1
임시 및 일용노무자	1,189(100.0)	29.3	582(48.9)	27.2	607(51.1)	31.7

구 분	제2계층(한계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공무원	306(100.0)	2.4	92(30.1)	2.8	214(69.9)	2.3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3,167(100.0)	25.3	1,041(32.9)	32.0	2,126(67.1)	23.0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7,254(100.0)	57.9	1,781(24.6)	54.7	5,473(75.4)	59.1
임시 및 일용노무자	1,792(100.0)	14.3	343(19.1)	10.5	1,449(80.9)	15.6

구 분	제3계층(중산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공무원	1,021(100.0)	11.5	190(18.6)	13.8	831(81.4)	11.1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3,241(100.0)	36.5	619(19.1)	45.0	2,622(80.9)	34.9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4,012(100.0)	45.1	511(12.7)	37.2	3,501(87.3)	46.6
임시 및 일용노무자	617(100.0)	6.9	55(8.9)	4.0	562(91.1)	7.5

구 분	제4계층(고소득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공무원	1,884(100.0)	24.5	235(12.5)	32.4	1,649(87.5)	23.7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3,178(100.0)	41.4	304(9.6)	41.9	2,874(90.4)	41.3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2,414(100.0)	31.4	161(6.7)	22.2	2,253(93.3)	32.4
임시 및 일용노무자	207(100.0)	2.7	26(1 2.6)	3.6	181(87.4)	2.6

한계계층에서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기능공 및 상용노동자가 56.1%로 가장 비중이 높다. 서민계층에서도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의 비중이 57.9%로 가장 높으나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비중은 한계계층보다 적어 14.3%를 차지하고 있다. 서민계층은 한계계층에 비해 공무원외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산층에서도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의 비중이 45.1%로 가장 높다. 그러나 공무원외 사무종사자의 비중 36.5%로 서민층에 비해 약 10%정도 비중이 더 크다. 고소득층인 4계층은 공무원외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4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로 31.4%를 차지하고 있다. 동일한 사무종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종사비중은 60%로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의 52.6%,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4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민층에서도 공무원외 사무종사자의 적자가구비중이 32.8%이고 공무원이 30%, 그 다음으로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24.5%, 임시 및 일용노무자 19.1%순이다. 중산층에서는 사무종사자중 적자가구비중이 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공무원 18.6% 그리고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12.7%등의 순이다. 고소득계층에서는 공무원 중 적자가구의 비중이 12.4%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무종사자로 조사되었다. 적자가구의 절대적인 비중은 계층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서 이미 확인 한 바 있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와 가계수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또는 공무원이 다른 종사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적자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각 계층별 순위를 볼 때 종사상 지위가 안정될수록 적자가구가 될

확율이 높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가구원수와 가계수지

일반적으로 동일 소득계층내에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적자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가구원수와 가계수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표 3-32〉 소득계층별 가구원수와 가계수지

구 분	제1계층(한계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1인	0(100.0)	0.0	0	0.0	0	0.0
2인	1,725(100.0)	42.6	797(46.2)	37.3	928(53.8)	48.4
3인	1,406(100.0)	34.7	731(52.0)	34.2	675(48.0)	35.2
4인	773(100.0)	19.1	514(66.5)	24.1	259(33.5)	13.5
5인	129(100.0)	3.2	84(65.1)	3.9	45(34.9)	2.3
6인 이상	20(100.0)	0.5	11(55.0)	0.5	9(45.0)	0.5

구 분	제2계층(서민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1인	0(100.0)	0.0	0	0.0	0	0.0
2인	2,851(100.0)	22.8	509(17.9)	15.6	2,342(82.1)	25.3
3인	3,533(100.0)	28.2	898(25.4)	27.6	2,635(74.6)	28.4
4인	4,947(100.0)	39.5	1,447(29.3)	44.4	3,500(70.7)	37.8
5인	911(100.0)	7.3	318(34.9)	9.8	593(65.1)	6.4
6인 이상	277(100.0)	2.2	85(30.7)	2.7	192(69.3)	2.0

구 분	제3계층(중산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1인	0(100.0)	0.0	0	0.0	0	0.0
2인	1,318(100.0)	14.8	154(11.7)	11.2	1,164(88.3)	15.5
3인	2,354(100.0)	26.5	329(14.0)	23.9	2,025(86.0)	26.9
4인	3,893(100.0)	43.8	645(16.6)	46.9	3,248(83.4)	43.2
5인	985(100.0)	11.1	174(17.7)	12.7	811(82.3)	10.8
6인 이상	341(100.0)	3.8	73(21.4)	5.4	268(78.6)	3.6

구 분	제4계층(고소득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1인	0(100.0)	0.0	0	0.0	0	0.0
2인	972(100.0)	12.7	79(8.1)	10.9	893(91.9)	12.8
3인	1,848(100.0)	24.1	179(9.7)	24.7	1,669(90.3)	24.0
4인	3,291(100.0)	42.8	273(8.3)	37.6	3,018(91.7)	43.4
5인	1,078(100.0)	14.0	149(13.8)	20.5	929(86.2)	13.4
6인 이상	494(100.0)	6.5	46(9.3)	6.4	448(90.7)	6.4

분석결과,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적자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계계층의 경우, 2인 가구 중 적자가구의 수는 797가구로 한계계층내 2인가구수 1,725가구의 46.2%인데 반해 3인가구는 52%, 4인가구는 66.5%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민층의 경우도, 2인 가구의 적자가구비중은 17.8%, 3인 가구는 25.4%, 4인가구는 29.2%, 5인 가구는 34.9%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의 경우에도 2인 가구 11.7%, 3인 가구 14%, 4인 가구 16.5%등으로 가구원수와 수지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인, 3인, 4인 가구까지는 적자가구비중이 증가하지 않다가 5인 가구의 적자가구비중은 13.8%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가구원수와 가계수지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가구주 성별

가구주의 성별과 가계수지간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우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남성가구주비중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계계층의 남성가구주비중은 53%인데 반하여 서민층의 경우는 81.6%, 중산층 89.5%, 그리고 고소득층은 91.6%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계계층의 남성가구주가구의 적자가구의 수는 1,174가구로 한계계층 중 남성가구수 2,161가구의 54.3% 인데 여성가구주가구의 적자가구비중은 50.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민층의 경우에도 26.7% 와 23%, 중산층 15.6% 와 14.3%, 고소득층 9.5% 와 9%로 가구주성별과 적자가구 확률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거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3〉 가구주 성별과 가계수지

구 분	제1계층(한계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남자	2,161(100.0)	53.3	1,174(54.3)	54.9	987(45.7)	51.5
여자	1,892(100.0)	46.7	963(50.9)	45.1	929(49.1)	48.5
구 분	제2계층(서민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남자	10,220(100.0)	81.6	2,730(26.7)	83.8	7,490(73.3)	80.9
여자	2,299(100.0)	18.4	527(22.9)	16.2	1,772(77.1)	19.1
구 분	제3계층(중산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남자	7,958(100.0)	89.5	1,242(15.6)	90.3	6,716(84.4)	89.4
여자	933(100.0)	10.5	133(14.3)	9.7	800(85.7)	10.6

구 분	제4계층(고소득계층)		적자가계		비적자가계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남자	7,037(100.0)	91.6	668(9.5)	92.0	6,369(90.5)	91.5
여자	646(100.0)	8.4	58(9.0)	8.0	588(91.0)	8.5

4. 가구주연령과 가계수지

가구주연령은 그 가구의 연령구성 그리고 소비수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가구주의 연령과 가계수지간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한계계층의 가구주 연령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대로 29%, 그 다음으로 30대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서민층의 경우, 30대가 38%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40대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30대와 40대가 35%로 같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은 40대가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4〉 가구주 연령과 가계수지

구 분	제1계층(한계계층)		적자가계		비적자가계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0~9세	0(100.0)	0.0	0	0.0	0	0.0
10~19세	8(100.0)	0.2	1(12.5)	0.0	7(87.5)	0.4
20~29세	534(100.0)	13.2	276(51.7)	12.9	258(48.3)	13.5
30~39세	1,018(100.0)	25.1	599(58.8)	28.0	419(41.2)	21.9
40~49세	1,179(100.0)	29.1	652(55.3)	30.5	527(44.7)	27.5
50~59세	755(100.0)	18.6	380(50.3)	17.8	375(49.7)	19.6
60~69세	499(100.0)	12.3	198(39.7)	9.3	301(60.3)	15.7
70~79세	60(100.0)	1.5	31(51.7)	1.5	29(48.3)	1.5
80세 이상	0(100.0)	0.0	0	0.0	0	0.0

구 분	제2계층(서민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0~9세	0(100.0)	0.0	0	0.0	0	0.0
10~19세	9(100.0)	0.1	2(22.2)	0.1	7(77.8)	0.1
20~29세	1,765(100.0)	14.1	414(23.5)	12.7	1,351(76.5)	14.6
30~39세	4,764(100.0)	38.1	1,263(26.5)	38.8	3,501(73.5)	37.8
40~49세	3,412(100.0)	27.3	1,050(30.8)	32.2	2,362(69.2)	25.5
50~59세	1,729(100.0)	13.8	400(23.1)	12.3	1,329(76.9)	14.4
60~69세	785(100.0)	6.3	123(15.7)	3.8	662(84.3)	7.2
70~79세	54(100.0)	0.4	5(9.3)	0.2	49(90.7)	0.5
80세 이상	1(100.0)	0.0	0(0.0)	0.0	1(100.0)	0.0

구 분	제3계층(중산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0~9세	0(100.0)	0.0	0	0.0	0	0.0
10~19세	5(100.0)	0.1	3(60.0)	0.2	2(40.0)	0.0
20~29세	740(100.0)	8.3	82(11.1)	6.0	658(88.9)	8.8
30~39세	3,174(100.0)	35.7	397(12.5)	28.9	2,777(87.5)	37.0
40~49세	3,134(100.0)	35.3	595(19.0)	43.3	2,539(81.0)	33.8
50~59세	1,492(100.0)	16.8	269(18.0)	19.6	1,223(82.0)	16.3
60~69세	330(100.0)	3.7	22(6.7)	1.6	308(93.3)	4.1
70~79세	16(100.0)	0.2	7(43.8)	0.5	9(56.2)	0.1
80세 이상	0(100.0)	0.0	0	0.0	0	0.0

구 분	제4계층(고소득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0~9세	0(100.0)	0.0	0	0.0	0	0.0
10~19세	0(100.0)	0.0	0	0.0	0	0.0
20~29세	359(100.0)	4.7	27(7.5)	3.7	332(92.5)	4.8
30~39세	2,273(100.0)	29.6	133(5.9)	18.3	2,140(94.1)	30.8
40~49세	3,006(100.0)	39.1	319(10.6)	43.9	2,687(89.4)	38.6
50~59세	1,761(100.0)	22.9	229(13.0)	31.5	1,532(87.0)	22.0
60~69세	277(100.0)	3.6	18(6.5)	2.5	259(93.5)	3.7
70~79세	7(100.0)	0.1	1(14.3)	0.1	6(85.7)	0.1
80세 이상	0(100.0)	0.0	0	0.0	0	0.0

한계계층의 경우 20대부터 50대까지 50%내외로 적자가구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대는 3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민층의 경우, 20대가 23%, 30대는 조금 더 높아 26%, 40대에 3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50대에 23%, 60대에 15%로 전형적인 생애 주기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40대의 경우, 자녀교육 등으로 가장 소비수요가 큰 시기이므로 적자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의 경우에도 20대에 11%, 30대 12%, 40대 19% 그리고 50대 18%로 서민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서민층과 중산층과는 달리 50대에 적자가구비중이 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가구주 교육정도와 가계수지

소득계층별로 교육수준을 비교해 보면 한계계층은 고등학교졸업자비중이 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졸업으로 20.9%를 보이고 있다. 서민층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졸업이 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학교졸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은 고등학교졸업이 40%, 대학교졸업이 27%로 그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경우, 대학교졸업자비중이 3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졸업으로 33%를 나타내고 있다.

한계계층, 서민층, 중산층까지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적자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계계층의 경우, 가구주가 중학교졸업인 가구의 수는 845가구이고 이중에서 적자가구의 수는 406가구로 적자가구비중은 48%가 된다. 고등학교졸업은 56%, 전문대학은 55%, 대학교 60%, 대학원 73%의 적자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3-35〉 가구주 교육수준과 가계수지

구 분	제1계층(한계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무학	113(100.0)	2.8	39(34.5)	1.8	74(65.5)	3.9
초등학교	696(100.0)	17.2	327(47.0)	15.3	369(53.0)	19.3
중학교	845(100.0)	20.9	406(48.0)	19.0	439(52.0)	22.9
고등학교	1,739(100.0)	42.9	973(56.0)	45.5	766(44.0)	40.0
전문대학	297(100.0)	7.3	165(55.6)	7.7	132(44.4)	6.9
대학교	311(100.0)	7.7	189(60.8)	8.8	122(39.2)	6.4
대학원	52(100.0)	1.3	38(73.1)	1.8	14(26.9)	0.7

구 분	제2계층(서민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무학	152(100.0)	1.2	21(13.8)	0.6	131(86.2)	1.4
초등학교	1,235(100.0)	9.9	206(16.7)	6.3	1,029(83.3)	11.1
중학교	1,683(100.0)	13.4	385(22.9)	11.8	1,298(77.1)	14.0
고등학교	6,063(100.0)	48.4	1,548(25.5)	47.5	4,515(74.5)	48.8
전문대학	1,226(100.0)	9.8	350(28.5)	10.8	876(71.5)	9.5
대학교	1,882(100.0)	15.0	618(32.8)	19.0	1,264(67.2)	13.7
대학원	278(100.0)	2.2	129(46.4)	4.0	149(53.6)	1.6

구 분	제3계층(중산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무학	35(100.0)	0.4	1(2.9)	0.1	34(97.1)	0.5
초등학교	486(100.0)	5.5	41(8.4)	3.0	445(91.6)	5.9
중학교	948(100.0)	10.7	138(14.6)	10.0	810(85.4)	10.8
고등학교	3,635(100.0)	40.9	500(13.8)	36.4	3,135(86.2)	41.7
전문대학	939(100.0)	10.6	142(15.1)	10.3	797(84.9)	10.6
대학교	2,414(100.0)	27.2	449(18.6)	32.7	1,965(81.4)	26.1
대학원	434(100.0)	4.9	104(24.0)	7.6	330(76.0)	4.4

구 분	제4계층(고소득계층)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대상가구수	백분율
무학	20(100.0)	0.3	3(15.0)	0.4	17(85.0)	0.2
초등학교	225(100.0)	2.9	15(6.7)	2.1	210(93.3)	3.0
중학교	510(100.0)	6.6	50(9.8)	6.9	460(90.2)	6.6
고등학교	2,596(100.0)	33.8	204(7.9)	28.1	2,392(92.1)	34.4
전문대학	683(100.0)	8.9	52(7.6)	7.2	631(92.4)	9.1
대학교	2,670(100.0)	34.8	276(10.3)	38.0	2,394(89.7)	34.4
대학원	979(100.0)	12.7	126(12.9)	17.4	853(87.1)	12.3

서민층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16%, 중학교 22.8%, 고등학교 25.5%, 전문대학 28.5%, 대학교 32.8%, 그리고 대학교 46.4%로 분석되었다. 중산층에서는 초등학교 8.4%, 중학교 14.5%, 고등학교 13.7%, 전문대학 15.1%, 대학교 18.6%, 대학원 24%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자들 중 적자가구비중이 9.8%로 고등학교 7.8%, 전문대학교 7.6%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대학교졸업자중 적자가구비중이 10.3%로 다시 증가하고 대학원은 1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순적자가구의 소비지출항목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식료품과 교통통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 비중은 한계계층이 가장 높고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중산계층이며 거주지역간 격차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는 교육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지역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6〉 소득계층의 거주지역별 소비지출구성

(단위: %)

한계계층(제1계층)	순적자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식료품	27.6	28.4	31.8	32.7
주거	8.0	5.4	5.7	4.6
광열·수도	6.0	6.9	7.7	8.2
가구집기가사용품	3.7	3.1	2.5	2.3
피복 및 신발	5.8	5.2	4.4	4.2
보건의료	5.4	5.1	4.2	4.5
교육	5.1	7.6	5.8	5.4
교양 오락	5.3	3.7	3.1	2.6
교통통신	16.5	14.5	14.1	14.7
비소비지출	6.0	6.9	8.5	7.5

서민계층(제2계층)	순적자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식료품	21.6	21.6	29.9	28.7
주거	5.6	3.5	4.0	3.2
광열·수도	3.7	4.2	5.7	5.8
가구집기가사용품	5.9	4.5	2.4	2.4
피복 및 신발	4.9	4.8	4.4	4.8
보건의료	6.7	5.8	3.5	3.6
교육	9.1	9.6	7.2	7.9
교양 오락	8.3	6.3	3.4	3.1
교통통신	13.7	16.0	14.5	14.9
비소비지출	6.2	9.9	9.3	10.6

중산계층(제3계층)	순적자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식료품	17.1	16.6	26.5	25.3
주거	3.8	2.6	2.7	2.2
광열·수도	3.2	2.6	4.7	4.4
가구집기가사용품	6.9	6.2	2.6	2.7
피복 및 신발	5.8	4.5	4.9	4.9
보건의료	6.1	4.0	3.0	3.3
교육	11.7	10.6	8.1	9.1
교양 오락	3.7	10.2	4.3	3.4
교통통신	17.6	17.7	13.7	14.0
비소비지출	9.0	11.6	12.8	15.1

고소득계층(제4계층)	순적자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식료품	15.1	11.9	22.6	20.7
주거	3.6	3.3	2.0	1.9
광열·수도	2.3	2.1	3.7	3.6
가구집기가사용품	7.6	5.1	3.4	3.2
피복 및 신발	3.5	4.6	5.2	5.0
보건의료	6.5	3.1	3.1	3.0
교육	11.9	9.6	8.6	9.0
교양 오락	8.8	6.0	4.3	3.6
교통통신	10.3	22.9	12.5	12.6
비소비지출	14.7	15.7	17.2	21.2

순적자가구의 소비지출금액을 거주지역별로 비교해 보았다. 식료품비는 지역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간 차이가 큰 항목은 교양오락과 교통통신비이며 소득계층에 따라 지출금액이 큰 지역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교양오락의 경우 한계계층과 서민계층에서는 서울지역거주자들의 평균지출액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산계층과 고소득층에서 적자가구는 기타시 거주자들의 평균지출금액이 더 크고 비적자가구에서는 서울지역거주자들의 평균지출액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통신비는 적자가구와 비적자가구 간 절대금액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한계계층과 서민계층에서는 지역별 금액의 격차가 적으나 중산계층에서는 적자가구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교통통신비가 기타시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다. 고소득계층에서는 적자가구의 경우 기타시 거주자의 지출액이 서울거주자의 지출액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비지출은 중산층 이상에서는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지출금액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간 격차와 적자, 비적자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항목은 교통통신비이며 자동차 구매에 따른 비용이

반영되어 절대금액이 크게 나타나며 또한 이것이 적자가구가 되는 큰 요인 중의 하나임을 추정할 수 있다.

〈표 3-37〉 소득계층의 거주지역별 소비지출금액

(단위: 원)

한계계층(제1계층)	순적자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식료품	336,468	332,890	315,183	276,796
주거	123,439	80,770	60,454	41,045
광열·수도	74,802	78,208	73,950	68,564
가구집기사용품	58,076	41,673	31,870	22,857
피복 및 신발	82,087	66,040	49,350	41,218
보건의료	79,807	68,554	49,745	43,796
교육	70,378	110,671	76,061	63,740
교양 오락	100,790	56,968	37,827	24,660
교통통신	241,244	267,041	152,279	138,791
기타소비지출	142,168	169,576	132,017	126,363
비소비지출	88,186	120,217	90,667	81,956

서민계층(제2계층)	순적자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식료품	477,298	459,058	431,902	405,262
주거	133,233	84,384	59,767	47,563
광열·수도	81,624	86,048	80,457	81,253
가구집기가사용품	163,358	129,172	38,113	38,815
피복 및 신발	122,780	109,368	66,920	73,669
보건의료	161,585	150,782	57,560	59,180
교육	237,568	258,931	120,758	141,500
교양 오락	216,677	156,089	55,706	51,821
교통통신	672,415	654,787	222,771	223,431
기타소비지출	371,468	332,436	245,787	230,862
비소비지출	170,092	241,222	146,401	167,950

중산계층(제3계층)	순적자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식료품	567,350	559,154	529,357	514,777
주거	250,607	92,591	61,080	53,254
광열·수도	102,645	90,503	91,404	89,048
가구집기가사용품	236,699	231,866	58,863	64,468
피복 및 신발	228,306	154,159	105,805	107,727
보건의료	291,098	165,189	69,373	77,373
교육	564,308	441,014	207,520	222,614
교양 오락	135,956	371,557	107,932	80,156
교통통신	1,851,938	1,355,410	274,621	300,230
기타소비지출	547,782	490,167	359,098	343,068
비소비지출	340,343	514,955	281,767	342,096

고소득계층(제4계층)	순적자			
	적자가구		비적자가구	
	서울	기타 시	서울	기타 시
식료품	736,420	665,910	688,189	618,307
주거	299,180	291,339	65,438	70,294
광열·수도	118,246	106,477	112,673	105,951
가구집기기사용품	560,909	380,484	139,473	136,884
피복 및 신발	171,889	342,705	183,361	171,724
보건의료	397,444	196,789	110,712	103,196
교육	724,745	561,620	335,881	316,039
교양 오락	604,446	322,844	167,567	131,432
교통통신	750,559	2,991,576	380,555	411,965
기타소비지출	895,635	1,117,234	616,401	575,511
비소비지출	1,055,646	978,669	603,703	696,961

제 4 장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찰

제 1 절 개 요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조기 구축하는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사회복지예산은 1997년 4.3조원(일반회계의 6.8%)에서 2002년 10조원(일반회계의 10%)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에 4대 사회보험이 확대 실시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도입(2000년 10월)되는 등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산·서민층은 교육·보건의료·주거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간 소득분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상위소득계층에게 소득이 더욱 집중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위기 과정에서 서민층 및 중산층의 소득은 하향한 데 비해 상위층의 소득은 상승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생활안정대책이 중산·서민층의 생활실태에 뚜렷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난 7년간 도시가계연보에 나타난 중산·서민층의 조세·교육·보건의료 등의 생활실태지표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화조사를 통해 재경부에서 발표한 현행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재경부,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2003년)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대책, 기본생계대책, 의료보장대책, 거주대책 및 복지서비스대책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 2 절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

경제위기 이후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취한 대책 중 핵심이 되는 대책은 조세정책(근로자 세부담 경감 등)과 사회안전망 제도 등을 통한 중산·서민층 기본적 생활안정 지원정책이다.

1. 조세정책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특히 1998년에 악화된 중산·서민층의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산·서민층 지원대책으로 이전에 비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큰 폭으로 경감하는 조세정책이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 세부담 경감정책의 내역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공제 규모와 한도 확대, 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의 공제한도 인상, 주택구입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인상 등이다. 이러한 근로소득세 세율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총 44조의 근로소득세가 경감되었다(재경부,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2003년 9월). 이와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지원도 추진되어 왔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세금경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중소·벤처기업 출자 소득공제 인상, 코스닥등록 중소기업 감면), 설비투자 지원(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연장,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폐기시설 세액공제) 등이 시행되어 왔다.

2. 중산·서민층 기본적 생활안정 지원정책

중산·서민층의 기본적 생활안정 지원정책으로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및 4대 사회보험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 제도의 확충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강화 및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표 4-1 참조). 또한 서민생활

의 부담완화를 위한 자녀교육비 지원, 지역의료보험 지원,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등의 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이 추진되어 왔다.

〈표 4-1〉 중산·서민층 기본적 생활안정 지원대책

정 책 종 류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보험의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소득보장 기능 강화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자영업자 소득과약을 제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 저소득층 만5세아 보육료 지원 확대 •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 참여형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 • 퇴직연금제도 도입 •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 유치원 중일반 운영 확대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습준비물 등 지원확대 •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강화 및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 확대실시 • 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 장애인 직업재활대책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급·서민주택금융 확대 등 서민주거생활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임대주택 건설 • 서민주택금융 강화 •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원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 국민·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체계 구축 • 국민 금연종합대책 추진

자료: 재경부,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2003년 9월 발표자료 중 일부.

제 3 절 생활안정대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 조세측면

조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소득세 부담정도를 소득계층별, 연도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소득분위별 소득세 납부 절대 금액은 살펴보면 물론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소득세의 금액이 많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1999년을 제외하고 전 소득계층에서 소득세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4-2〉 소득계층별 소득세 금액

(단위: 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고소득층	136,964	133,181	161,636	189,972	192,518
중 산 층	36,989	34,673	38,730	48,639	50,320
서 민 층	10,260	9,505	10,101	12,222	12,924
한계계층	964	897	750	805	1,282
전체평균	45,822	44,136	50,994	61,934	63,160

주: 한계계층 -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
 서 민 층 - 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00% 미만인 계층
 중 산 층 - 중위소득 100% 이상 150% 미만인 계층
 고소득층 - 중위소득 150% 이상인 계층

자료: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다음으로 소득분위별 소득세의 부담정도를 경상소득에 대한 비율로 살펴보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경우 고소득층 4.25%, 중산층 1.66%, 서민층 0.72%, 한계계층 0.13%로 나타났다. 근로자 소득세부담 경감폭이 확대된 1999년에는 고소득층 3.10%, 중산층 1.50%, 서민층 0.64%, 한계계층 0.12%로 전 소득계층의 경상소득 대비 소득세 부담 비율이 감소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소득세 부담 비율의 감소폭이 고소득층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2000년과 2001년의 고소득층의 경상소득 대비 소득세 부담비율은 각각 3.56%, 3.83%로 199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3.64%로 1998년보다 0.61%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와 반면에 중산층의 경상소득 대비 소득세 부담비율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1.66%에서 1.72%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서민층의 경우에는 0.04% 감소하였으나 고소득층의 감소폭(0.61%)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이다.

〈표 4-3〉 경상소득 대비 소득세 비중

(단위: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고소득층	4.25	3.10	3.56	3.83	3.64
중산층	1.66	1.50	1.56	1.77	1.72
서민층	0.72	0.64	0.63	0.69	0.68
한계계층	0.13	0.12	0.1	0.09	0.13
전체평균	1.73	1.38	1.48	1.64	1.58

자료: 『도시경제연보』, 각 연도.

또한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외국(일본,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높고, 경제위기 이후 간접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반적인 조세정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간접세는 비례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요구되는 부담률이 높아져서 형평성을 악화하게 한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높아진 간접세 비중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위주로 조세제도를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⁴⁾

4) 물론 이러한 전환에는 세원포착률을 제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표 4-4〉 한국의 직·간접세 비율 (1996~2003년)

(단위: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예산)
직접세	52.9	50.5	55.3	49.5	51.2	50.4	50.6	48.7
간접세	47.1	49.5	44.7	50.5	48.8	49.6	49.4	51.3

자료: 재경부, 『조세개요』, 2003년 6월.

2. 교육비측면

교육비가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적은 소득으로 교육비에 낮은 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교육비로 말미암아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연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996년 경상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고소득층 6.64%, 중산층 7.13%, 서민층 7.10%, 한계계층 10.19%이었다.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고소득층 6.99%, 중산층 7.21%, 서민층 6.89%, 한계계층 14.13%로 나타나,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각 계층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2년에는 고소득층 7.48%, 중산층 8.17%, 서민층 8.34%, 한계계층 10.64%로 각 계층의 경상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이 경제위기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중산·서민층의 비중은 고소득층에 비해 더욱 증가되었다.

〈표 4-5〉 교육비 지출금액

(단위: 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고소득층	232,214	258,149	242,278	268,542	288,653	306,018	328,003
중산층	150,685	159,639	154,084	163,137	195,836	217,629	228,402
서민층	93,895	104,753	91,460	107,972	118,525	127,119	145,688
한계계층	58,577	61,997	60,572	60,364	64,379	73,384	73,160
전체평균	136,830	149,229	139,700	154,470	171,685	186,445	201,266

주: 교육비는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방구 등으로 구성됨.
 자료: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표 4-6〉 경상소득 대비 교육비지출 비중

(단위: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고소득층	6.64	6.91	6.99	7.53	7.41	7.34	7.48
중 산 층	7.13	7.00	7.21	7.42	8.37	8.45	8.17
서 민 층	7.10	7.38	6.89	7.92	8.09	8.06	8.34
한계계층	10.19	10.72	14.13	12.54	21.38	13.80	10.64
전체평균	7.32	7.50	7.83	8.25	9.56	8.68	8.37

자료: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이번에는 교육비 중에서 보충교육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경상소득대비 보충교육비 지출 비중은 소득계층에 거의 역비례하여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충교육비가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고, 게다가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표 4-7 참조). 이러한 중산·서민층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은 중산·서민층 가계의 파행적 운영을 뜻하는 것이다.

〈표 4-7〉 보충교육비 지출금액

(단위: 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고소득층	94,737	102,478	94,402	105,253	120,998	132,408	144,595
중 산 층	67,459	70,137	61,375	65,627	82,041	95,873	106,210
서 민 층	39,215	43,189	34,498	40,235	45,973	53,088	61,617
한계계층	23,216	21,509	18,175	19,277	25,255	27,606	32,445
전체평균	57,770	61,485	53,718	59,670	70,333	79,902	89,245

주: 보충교육비는 학원비, 도서관, 기타 교육비 등으로 구성됨.

자료: 『도시경제연보』, 각 연도.

〈표 4-8〉 경상소득 대비 보충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고소득층	2.67	2.73	2.65	2.90	3.02	3.06	3.36
중 산 층	3.16	3.06	2.85	2.94	3.38	3.63	3.73
서 민 층	2.94	3.00	2.54	2.89	3.09	3.27	3.46
한계계층	4.02	3.81	4.58	4.23	7.36	5.15	4.93
전체평균	3.05	3.04	2.88	3.07	3.65	3.54	3.69

자료: 『도시경제연보』, 각 연도.

3. 보건의료 및 주거측면

소득분위별 보건의료비지출의 부담정도를 경상소득에 대한 비율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이전자료인 1997년의 경상소득 대비 보건의료지출 비중은 고소득층 2.58%, 중산층 2.94%, 서민층 3.74%, 한계계층 7.78%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 고소득층 2.46%, 중산층 2.95%, 서민층 3.66%, 한계계층 11%로 나타

나 한계계층의 보건의료비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2년의 자료에 의하면 고소득층 2.61%, 중산층 3.01%, 서민층 3.95%, 한계계층 7.37%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경상소득 대비 보건의료지출 비중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기 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높은 보건의료지출 비중은 저소득층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제도 등의 사회안전망제도가 적절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주거측면도 보건의료측면과 같이 저소득층의 경상소득 대비 주거비지출 비중이 고소득층보다 높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지출비중이 다소라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도한 주거비로 인해 중산·서민층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표 4-9〉 보건의료지출금액

(단위: 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고소득층	84,342	89,935	80,105	92,527	98,074	104,852	109,081
중 산 층	60,280	65,666	61,928	68,177	69,021	76,315	79,893
서 민 층	50,901	51,127	47,022	52,008	56,440	59,286	65,590
한계계층	42,774	46,487	39,204	40,144	39,770	48,334	49,750
전체평균	60,119	63,187	57,794	64,358	67,304	73,116	77,571

주: 보건의료는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등으로 구성됨.

자료: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표 4-10〉 경상소득 대비 보건의료지출 비중

(단위: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고소득층	2.46	2.58	2.46	3.43	2.88	3.26	2.61
중 산 층	2.93	2.94	2.95	3.21	3.04	3.02	3.01
서 민 층	4.03	3.74	3.66	4.13	4.01	3.86	3.95
한계계층	7.51	7.78	11.00	11.76	9.11	9.61	7.37
전체평균	3.73	3.66	4.04	4.64	4.08	4.18	3.80

자료: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표 4-11〉 주거비 금액

(단위: 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고소득층	64,222	64,448	61,516	66,456	74,494	73,364	75,511
중 산 층	46,307	44,496	43,592	42,419	49,737	55,775	57,221
서 민 층	43,153	41,280	37,837	42,163	46,036	48,443	53,254
한계계층	46,347	42,769	41,270	43,173	43,619	50,714	52,734
전체평균	49,056	47,360	45,291	48,048	53,177	56,476	59,414

자료: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표 4-12〉 경상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중

(단위: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고소득층	1.81	1.81	1.78	2.06	2.15	1.88	1.78
중 산 층	2.21	1.96	2.04	1.94	2.13	2.14	2.07
서 민 층	3.36	2.99	2.96	3.19	3.30	3.15	3.15
한계계층	8.57	7.05	10.78	12.56	11.43	12.23	7.23
전체평균	3.22	2.84	3.34	3.73	3.66	3.67	3.03

자료: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제 4 절 생활안정대책의 전반적인 인지도 및 만족도

현행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대책, 기본생계대책, 의료보장대책, 거주대책 및 복지서비스대책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표본추출은 2002년 자활사업 실태조사 1차 가구 데이터 10,000가구 중에서 가구당 개인소득이 하위 50%인 가구(중위소득 57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기초보장수급가구는 제외). 추출된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중 일반 수급자 가구(전체 389가구)인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하였

고 추출방법은 단순임의 추출을 하였다.

1. 응답 가구의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4-13>과 같다. 전화 조사가 완료된 응답가구원은 총 422명으로 대도시 지역에 약 34.4%, 중소도시 지역에 25.6%, 읍·면 지역에 40%가 분포되어 있다.

전체 응답가구의 가구원수를 보면 전체가구에서 4인 이상 가구는 50.8%, 3인 가구는 14.0%, 2인가구는 21.8%, 1인 가구는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에서 일반가구는 58.5%, 부부가구 18.0%, 단독가구 12.8%, 부자가구, 모자가구,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거현황을 보면 전체가구에서 자가(65.4%), 전세(17.8%), 월세(9.5%), 무상(7.3%) 순으로 나타난다.

전체 응답가구의 가구당 개인소득 현황을 보면, 중위소득(57만원)의 90~80% 사이에 전체응답가구의 26.5%인 112가구가, 80~70% 사이에 전체 가구의 23.9%인 101가구가, 70~60% 사이에 전체 가구의 14.0%인 59가구가, 100~90% 사이에 전체 가구의 10.2%인 43가구가, 60~50% 사이에 전체 가구의 6.9%인 20가구가, 그리고 중위소득 50% 미만엔 전체 가구의 18.5%인 78가구가 분포되어 있다. 가구당 개인소득은 가구총소득(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사회보험급여,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 공적이전소득은 제외)을 가구원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소득이다.

전체 응답가구의 가구주 성별을 보면 남성인 경우가 81.3%이고 여성인 경우가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5.8%, 30대가 19.7%, 70대가 18.0%, 60대가 17.1%, 50대가 15.2%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비율이 32.8%로 가장 높으며 초졸 21.1%, 무학 15.4%, 대졸 12.1%, 중졸 11.6%, 전문대졸 5.0%, 대학원졸 1.9%로 분포되어 있고 가구주의 주된 활동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가 41.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가 31.8%, 연령이 높아서 일할 수 없는 경우가 13.7%, 장애·질환 등으로 일할 수 없음이 5.7%, 고용주가 2.1%, 구

직활동 중인 경우가 1.2%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가구주의 장애여부를 살펴보면 비해당의 경우가 95.3%이고 등록장애인이 3.5%, 비등록장애인이 1.2%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주의 만성질환여부를 보면 전체가구의 26.5%가 만성질환이 있고 73.5%가 만성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전체 응답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특 성	대상자수	백분율
조사지역	대도시 지역	145	34.4
	중소도시 지역	108	25.6
	읍, 면 지역	169	40.0
가구원수	1명	57	13.5
	2명	92	21.8
	3명	59	14.0
	4명 이상	214	50.8
	가구형태	일반가구(부부+자녀)	247
	부부가구	76	18.0
	모자가구	1	0.2
	부자가구	2	0.5
	단독가구	54	12.8
	기타	42	10.0
주거현황	자가	276	65.4
	전세	75	17.8
	월세	40	9.5
	무상	31	7.3
개인소득	중위소득 100%(57만원)	0	0.0
	100%~90%	43	10.2
	90%~80%	112	26.5
	80%~70%	101	23.9
	70%~60%	59	14.0
	60%~50%	29	6.9
	50%~40%	15	3.6
	40%~30%	26	6.2
	30%~20%	17	4.0
	20%~10%	12	2.8
	10%~0%	8	1.9

〈표 4-14〉 전체 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

구 분	특 성	대상자수(명)	백분율(%)
가구주성별	남	343	81.3
	여	79	18.7
가구주연령	10대	2	0.5
	20대	6	1.4
	30대	83	19.7
	40대	109	25.8
	50대	64	15.2
	60대	72	17.1
	70대	76	18.0
	80대	10	2.4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65	15.4
	초등학교	89	21.1
	중학교	49	11.6
	고등학교	138	32.8
	전문대	21	5.0
	대학교	51	12.1
	대학원	8	1.9
가구주의 주된활동	상용직 임금근로자	90	21.3
	임시직 임금근로자	41	9.7
	일용직 임금근로자	46	10.9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자	4	0.9
	고용주	9	2.1
	자영업자	134	31.8
	무급가족종사자	1	0.2
	직장없이 구직활동 중	5	1.2
	직장없이 구직활동 포기	4	0.9
	가사담당(구직의사 없음)	2	0.5
	연령이 높아서 일할 수 없음	58	13.7
	장애, 질환 등으로 일할 수 없음	24	5.7
	학업 및 진학준비	4	0.9
가구주 장애여부	비해당	402	95.3
	등록장애인	15	3.5
	비등록장애인	5	1.2
가구주 만성질환여부	있다	112	26.5
	없다	310	73.5

2. 조사결과와 해석

현행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바를 전체 응답가구의 특성과 소득계층별로 분류하여 결과를 정리, 분석하였다. 우선 소득계층별 분류는 개인소득(2002년 자활사업실태 1차 조사자료)의 중위값 50% 이상을 그룹 1로, 50% 미만을 그룹 2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 그룹1은 전체 가구의 81.5%인 344 가구이고 그룹2는 전체 가구의 18.5%인 78 가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여부, 취업활동 여부 등 응답가구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4-15〉 전체 응답가구의 소득계층 분류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그룹1(중위값의 50% 이상)	344	81.5
그룹2(중위값의 50% 미만)	78	18.5

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대책에 대한 의견

①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대책

- 장기실업자 및 여성의 자영업 창업지원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 실업자 대상 II(정보기술) 분야 전문교육과정
- 대학생 학자금 융자
-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② 인지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32명으로 5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56명으로 36.8%를 차지한 반면에 ‘거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명으로 8.5%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6〉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거의 알고 있다	36	8.5
절반정도 알고 있다	154	36.8
거의 모르고 있다	232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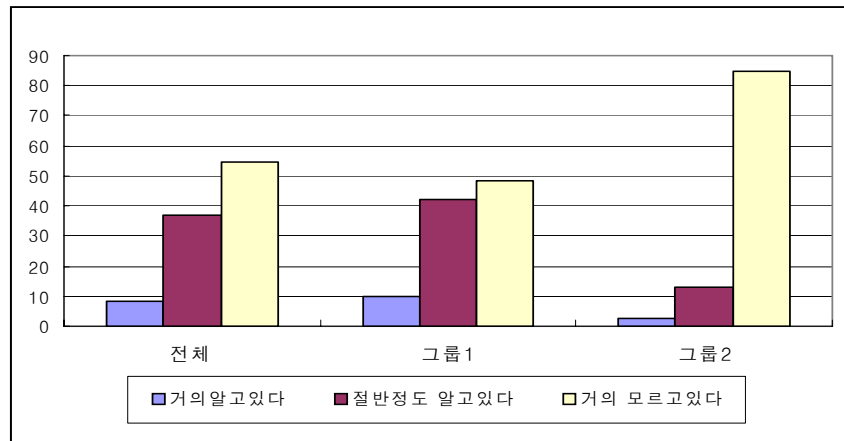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소득계층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의 48.3%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1.9%가 ‘절반정도 알고 있다’, 9.9%가 ‘거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룹 2의 경우 대상자의 84.6%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12.8%, ‘거의 알고 있다’는 2.6%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그룹 1의 경우가 그룹2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7〉 소득계층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그룹 1		그룹 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거의 알고 있다	34	9.9	2	2.6
절반정도 알고 있다	144	41.9	10	12.8
거의 모르고 있다	166	48.3	66	84.6

[그림 4-1]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대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표 4-18〉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35	10.2	139	40.5	169	49.3
여자	1	1.3	15	19.0	63	79.7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대상자의 49.3%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0.5%가 ‘절반정도 알고 있다’, 10.2%가 ‘거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 대상자의 79.7%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19.0%, ‘거의 알고 있다’는 1.3%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성 가구주의 경우가 여성 가구주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9〉 가구주 연령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10대	0	0.0	0	0.0	2	100.0
20대	0	0.0	1	16.7	5	83.3
30대	12	14.5	42	50.6	29	34.9
40대	11	10.1	51	46.8	47	43.1
50대	6	9.4	31	48.4	27	42.2
60대	2	2.8	15	20.8	55	76.4
70대	4	5.3	13	17.1	59	77.6
80대	1	10.0	1	10.0	8	80.0

가구주 연령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30대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14.5%, ‘절반정도 알고 있다’ 50.6%, ‘거의 모르고 있다’ 34.9%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40~50대의 인지도가 높고 10~2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인지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4-2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무학	1	1.5	10	15.4	54	83.1
초등학교	3	3.4	27	30.3	59	66.3
중학교	3	6.1	18	36.7	28	57.2
고등학교	11	8.0	62	44.9	65	47.1
전문대	7	33.3	7	33.3	7	33.3
대학교	9	17.6	24	47.1	18	35.3
대학원	2	25.0	5	62.5	1	12.5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문대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33.3%, ‘절반정도 알고 있다’ 33.3%, ‘거의 모르고 있다’ 33.3%이고 대학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25.0%, ‘절반정도 알고 있다’ 62.5%, ‘거의 모르고 있다’ 12.5%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나 무학, 초등학교 등 학력이 낮아질수록 인지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4-21〉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장애인	36	9.0	148	36.8	218	54.2
장애인	0	0.0	6	30.0	14	70.0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9.0%, ‘절반정도 알고 있다’ 36.8%, ‘거의 모르고 있다’ 54.2%로 응답한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 ‘절반정도 알고 있다’ 30.0%, ‘거의 모르고 있다’ 70.0%로 응답하였다.

〈표 4-22〉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31	9.4	135	40.8	165	49.8
실업자	5	5.5	19	20.9	67	73.6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9.4%, ‘절반정도 알고 있다’ 40.8%, ‘거의 모르고 있다’ 49.8%로 응답한 반면에 실업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5.5%, ‘절반정도 알고 있다’ 20.9%, ‘거의 모르고 있다’ 73.6%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실업자의 경우 비실업자보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③ 참여여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 가운데 귀택에서 참여한 사업이 있는 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명으로 4.3%에 불과했으며 95.7%인 404명은 참여한 사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3〉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있다	18	4.3
없다	404	95.7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소득계층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의 95.3%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4.7%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룹 2의 경우도 대상자의 97.4%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2.6%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그룹 1이 그룹2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약간 높은 편이나 2개 그룹의 참여도는 상당히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4-24〉 소득계층 그룹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있다	16	4.7	2	2.6
없다	328	95.3	76	97.4

〈표 4-25〉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14	4.1	329	95.9
여자	4	5.1	75	94.9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응답자의 4.1%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자의 경우 5.1%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26〉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무학	1	1.5	64	98.5
초등학교	2	2.2	87	97.8
중학교	3	6.1	46	93.9
고등학교	8	5.8	130	94.2
전문대	2	9.5	19	90.5
대학교	1	2.0	50	98.0
대학원	1	12.5	7	87.5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문대와 대학원의 경우 각각 응답자의 9.5%, 12.5%의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무학(1.5%)과 대학교(2.0%)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7〉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18	5.4	313	94.6
실업자	0	0.0	91	100.0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의 경우 응답자의 5.4%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실업자의 경우는 모든 응답자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대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④ 만족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대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8명으로 4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으로 33.3%,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명으로 22.2%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대책”에 대한 참여도는 낮았지만 참여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거의 80% 정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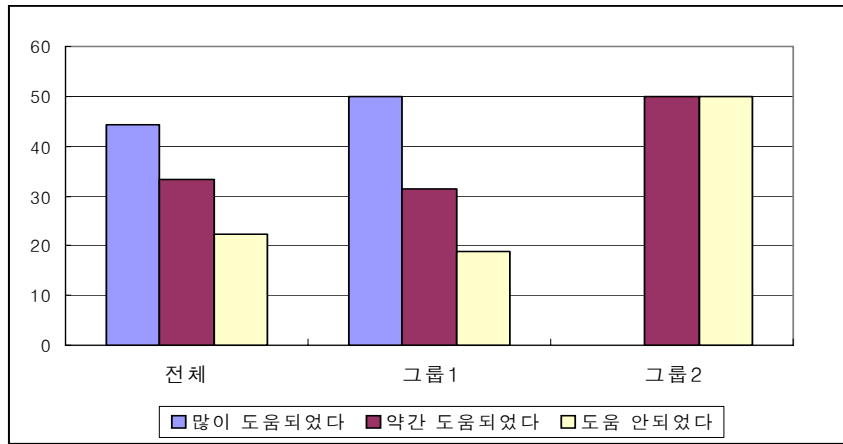
〈표 4-28〉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대상자수
많이 도움 되었다	8
약간 도움 되었다	6
도움 안되었다	4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참가한 경우의 만족도를 소득계층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 16명의 50.0%가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고 31.3%가 ‘약간 도움되었다’, 18.7%가 ‘도움 안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2]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비교



<표 4-29>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많이 도움되었다		약간 도움되었다		도움 안되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7	50.0	5	35.7	2	14.3
여자	1	25.0	1	25.0	2	50.0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많이 도움되었다’ 50.0%, ‘약간 도움되었다’ 35.7%, ‘도움안되었다’ 14.3%로 응답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 4명의 응답자 중 ‘많이 도움되었다’ 1명, ‘약간 도움되었다’ 1명, ‘도움 안되었다’에 2명이 응답하였다.

나.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의견

① 기본생계대책

-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부담 경감
- 농어민 부채부담 경감
-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 저소득층 학교급식 및 보육료 지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경로연금 지급

② 인지도

“기본생계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절반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79명으로 4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거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176명으로 41.8%를 차지하였다. ‘거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7명으로 15.8%에 그침을 알 수 있다.

〈표 4-30〉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거의 알고 있다	67	15.8
절반정도 알고 있다	179	42.5
거의 모르고 있다	176	41.8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소득계층 그룹 1의 경우 대상자의 48.0%가 ‘절반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4.0%가 ‘거의 모르고 있다’, 18.0%가 ‘거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소득계층 그룹 2의 경우 대상자의 75.6%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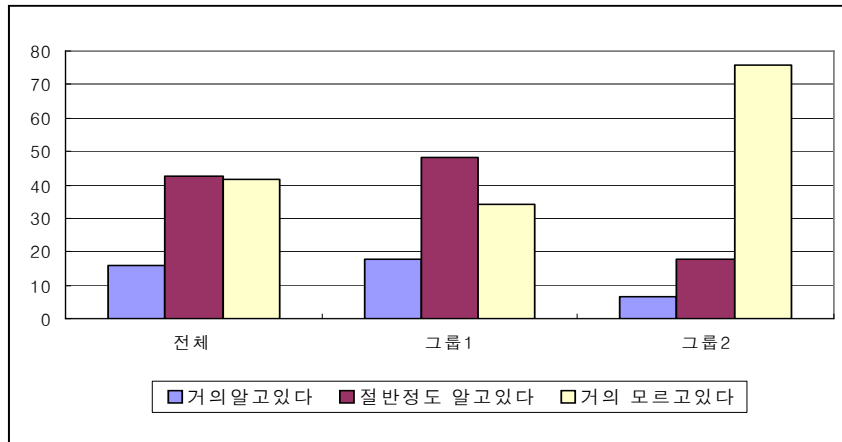
는 17.9%, ‘거의 알고 있다’는 6.4%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그룹1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본생계 대책”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룹 2에 비해 인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31〉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소득계층 그룹별)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거의 알고 있다	62	18.0	5	6.4
절반정도 알고 있다	165	48.0	14	17.9
거의 모르고 있다	117	34.0	59	75.6

[그림 4-3]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17.5%, ‘절반정도 알고 있다’ 47.2%, ‘거의 모르고 있다’ 35.3%로 응답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8.9%, ‘절반정도 알고 있다’

21.5%, ‘거의 모르고 있다’ 69.6%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32〉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60	17.5	162	47.2	121	35.3
여자	7	8.9	17	21.5	55	69.6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30대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21.7%, ‘절반정도 알고 있다’ 49.4%, ‘거의 모르고 있다’ 28.9%로 응답하였고 40대의 경우도 ‘거의 알고 있다’ 16.5%, ‘절반정도 알고 있다’ 54.1%, ‘거의 모르고 있다’ 29.4%로 응답, 30~40대의 경우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0대의 경우 응답자가 모두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70대 이상의 경우에도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33〉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10대	0	0.0	0	0.0	2	100.0
20대	1	16.7	3	50.0	2	33.3
30대	18	21.7	41	49.4	24	28.9
40대	18	16.5	59	54.1	32	29.4
50대	10	15.6	34	53.1	20	31.3
60대	11	15.3	23	31.9	38	52.8
70대	8	10.5	18	23.7	50	65.8
80대	1	10.0	1	10.0	8	80.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문대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33.3%, ‘절반정도 알고 있다’ 42.9%, ‘거의 모르고 있다’ 23.8%로 응답하였고 대학교와 대학원의 경우도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무학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3.1%, ‘절반정도 알고 있다’ 27.7%, ‘거의 모르고 있다’ 69.2%로 가구주의 학력이 낮아질수록 “기본생계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15.7%, ‘절반정도 알고 있다’ 42.0%, ‘거의 모르고 있다’ 42.3%로 응답하였다.

〈표 4-34〉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무학	2	3.1	18	27.7	45	69.2
초등학교	13	14.6	25	28.1	51	57.3
중학교	9	18.4	20	40.8	20	40.8
고등학교	25	18.1	74	53.6	39	28.3
전문대	7	33.3	9	42.9	5	23.8
대학교	10	19.6	27	52.9	14	27.5
대학원	1	12.5	5	62.5	2	25.0

〈표 4-35〉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장애인	63	15.7	169	42.0	170	42.3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16.0%, ‘절반정도 알고 있다’ 46.8%, ‘거의 모르고 있다’ 37.2%로 응답하였고 실업자의 경우는 ‘거의 알고 있다’ 15.4%, ‘절반정도 알고 있다’ 26.4%, ‘거의 모르고 있다’ 58.2%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실업자의 경우 비실업자에 비해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36〉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53	16.0	155	46.8	123	37.2
실업자	14	15.4	24	26.4	53	58.2

③ 참여여부

“기본생계대책” 가운데 귀택에서 참여한 사업이 있는 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참여한 사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명으로 5.7%에 불과했으며 94.3%인 398명은 참여한 사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4-37〉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있다	24	5.7
없다	398	94.3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의 94.8%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5.2%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룹 2의 경우도 대상자의 92.3%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7.7%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그룹 2가 그룹1에 비해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4-38〉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그룹별)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있다	18	5.2	6	7.7
없다	326	94.8	72	92.3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응답자의 6.1%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자의 경우는 응답자의 3.8%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9〉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21	6.1	322	93.9
여자	3	3.8	76	96.2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30대의 경우 참여도가 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70대(6.6%), 60대(5.6%) 순이었다. 그리고 10~20대와 80대의 경우는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전혀 없었다.

〈표 4-40〉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10대	0	0.0	2	100.0
20대	0	0.0	6	100.0
30대	7	8.4	76	91.6
40대	6	5.5	103	94.5
50대	2	3.1	62	96.9
60대	4	5.6	68	94.4
70대	5	6.6	71	93.4
80대	0	0.0	10	100.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중학교의 경우 응답자의 10.2%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교(6.5%), 대학교(5.9%) 순의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와 대학원의 경우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1〉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무학	3	4.6	62	95.4
초등학교	4	4.5	85	95.5
중학교	5	10.2	44	89.8
고등학교	9	6.5	129	93.5
전문대	0	0.0	21	100.0
대학교	3	5.9	48	94.1
대학원	0	0.0	8	100.0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5.7%의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42〉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장애인	23	5.7	379	94.3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의 경우 응답자의 5.4%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실업자의 경우는 6.6%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43〉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18	5.4	313	94.6
실업자	6	6.6	85	93.4

④ 만족도

“기본생계대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5명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명으로 44.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명으로 28.0%,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7명으로 2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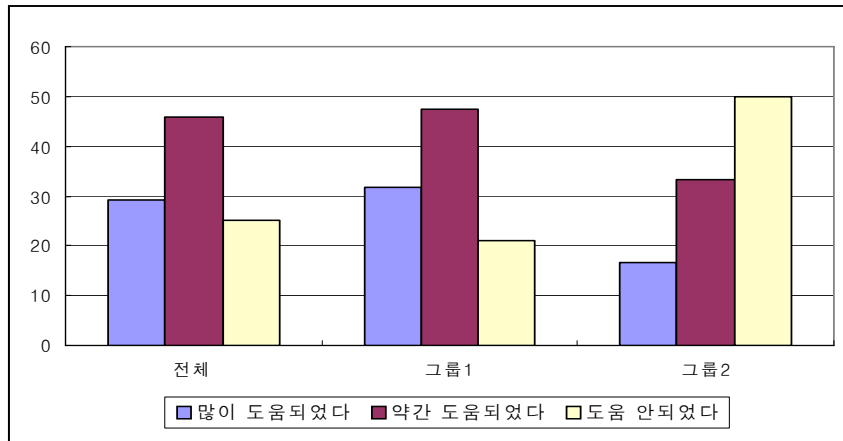
〈표 4-44〉 기본생계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많이 도움 되었다	7	28.0%
약간 도움 되었다	11	44.0%
도움 안되었다	7	28.0%

“기본생계 대책”에 참가한 경우의 만족도를 소득계층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 19명의 47.4%가 ‘약간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고 31.6%가 ‘많이 도움되었다’, 21.0%가 ‘도움 안되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룹 2의 경우 대상자 6명 중 50.0%가 ‘도움 안되었다’고 응답하였고 33.3%가 ‘약간 도움되었다’, 16.7%가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그룹1이 그룹2에 비해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4] 기본생계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비교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의 경우 ‘많이 도움되었다’는 26.3%, ‘약간 도움되었다’는 47.4%, ‘도움 안되었다’는 26.3%가 응답하였다.

〈표 4-45〉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본생계 대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많이 도움되었다		약간 도움되었다		도움 안되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5	26.3	9	47.4	5	26.3

다.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의견

① 의료보장대책

- 농어민, 노인·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경감
- 저소득층 대상 4대암(위암·유방암·자궁암·간암) 무료 검진
-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 제공

② 인지도

“의료보장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7명으로 46.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59명으로 37.7%를 차지하고 ‘거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명으로 15.6%에 그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6〉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거의 알고 있다	66	15.6
절반정도 알고 있다	159	37.7
거의 모르고 있다	197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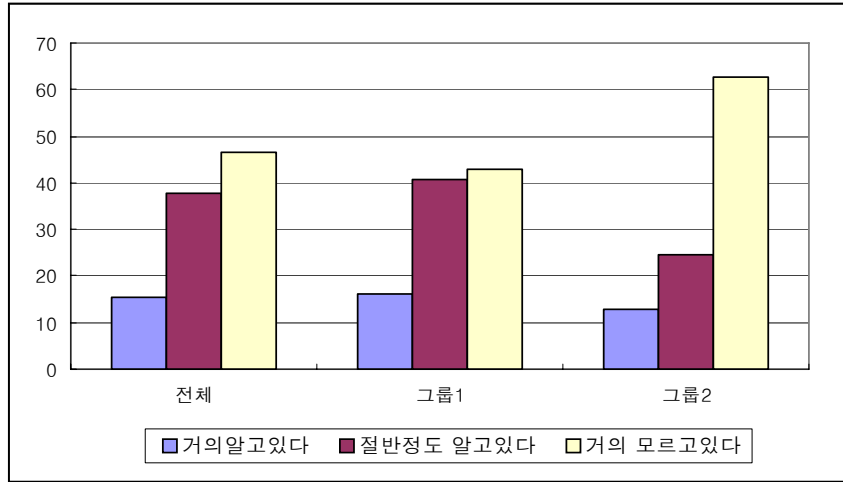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소득계층 그룹 1의 경우 대상자의 43.0%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0.7%가 ‘절반정도 알고 있다’, 16.3%가 ‘거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소득계층 그룹 2의 경우 대상자의 62.8%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24.4%, ‘거의 알고 있다’는 12.8%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그룹1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보장 대책”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룹 2에 비해 인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47〉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소득계층 그룹별)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거의 알고 있다	56	16.3	10	12.8
절반정도 알고 있다	140	40.7	19	24.4
거의 모르고 있다	148	43.0	49	62.8

[그림 4-5]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17.5%, ‘절반정도 알고 있다’ 40.5%, ‘거의 모르고 있다’ 42.0%로 응답하였고 여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7.6%, ‘절반정도 알고 있다’ 25.3%, ‘거의 모르고 있다’ 67.1%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48〉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60	17.5	139	40.5	144	42.0
여자	6	7.6	20	25.3	53	67.1

가구주 연령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50대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23.4%, ‘절반정도 알고 있다’ 37.5%, ‘거의 모르고 있다’ 39.1%로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30~40대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0~20대의 경우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49〉 가구주 연령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10대	0	0.0	0	0.0	2	100.0
20대	1	16.7	1	16.7	4	66.6
30대	14	16.9	32	38.5	37	44.6
40대	20	18.3	49	45.0	40	36.7
50대	15	23.4	24	37.5	25	39.1
60대	10	13.9	28	38.9	34	47.2
70대	6	7.9	21	27.6	49	64.5
80대	0	0.0	4	40.0	6	60.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중학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26.5%, ‘절반정도 알고 있다’ 40.8%, ‘거의 모르고 있다’ 32.7%가 응답하였고 대학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25.0%, ‘절반정도 알고 있다’ 37.5%, ‘거의 모르고 있다’ 37.5%가 응답,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무학과 초등학교의 경우는 ‘거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응답자의 70.8%, 52.8%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15.9%, ‘절반정도 알고 있다’ 36.8%, ‘거의 모르고 있다’ 47.3%로 응답하였고 장애인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10.0%, ‘절

반정도 알고 있다' 55.0%, '거의 모르고 있다' 35.0%로 응답하였다.

〈표 4-5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무학	2	3.1	17	126.1	46	70.8
초등학교	11	12.4	31	34.8	47	52.8
중학교	13	26.5	20	40.8	16	32.7
고등학교	29	21.0	55	39.9	54	39.1
전문대	4	19.0	11	52.4	6	28.6
대학교	5	9.8	21	41.2	25	49.0
대학원	2	25.0	3	37.5	3	37.5

〈표 4-51〉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장애인	64	15.9	148	36.8	190	47.3
장애인	2	10.0	11	55.0	7	35.0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16.6%, ‘절반정도 알고 있다’ 38.7%, ‘거의 모르고 있다’ 44.7%로 응답하였고 실업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12.1%, ‘절반정도 알고 있다’ 34.1%, ‘거의 모르고 있다’ 53.8%로 응답하였다.

〈표 4-52〉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55	16.6	128	38.7	148	44.7
실업자	11	12.1	31	34.1	49	53.8

③ 참여여부

“의료보장대책” 가운데 귀택에서 참여한 사업이 있는 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2명으로 7.6%였고 92.4%인 392명은 참여한 사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4-53〉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있다	32	7.6
없다	390	92.4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소득계층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의 93.3%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6.7%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룹 2의 경우는 대상자의 88.5%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1.5%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그룹 2가 그룹1에 비해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54〉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소득계층 그룹별)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있다	23	6.7	9	11.5
없다	321	93.3	69	88.5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응답자의 7.3%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자의 경우 응답자의 8.9%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여자의 경우가 남자에 비해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55〉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25	7.3	318	92.7
여자	7	8.9	72	91.1

가구주 연령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80대의 경우 응답자의 20.0%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70대(14.5%), 60대(13.9%) 순으로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56〉 가구주 연령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10대	0	0.0	2	100.0
20대	0	0.0	6	100.0
30대	1	1.2	82	98.8
40대	6	5.5	103	94.5
50대	2	3.1	62	96.9
60대	10	13.9	62	86.1
70대	11	14.5	65	85.5
80대	2	20.0	8	80.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응답자의 15.7%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대학원과 무학의 경우 각각 12.5%, 9.2%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대학교의 경우 2.0%만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57〉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무학	6	9.2	59	90.8
초등학교	14	15.7	75	84.3
중학교	3	6.1	46	93.9
고등학교	6	4.3	132	95.7
전문대	1	4.8	20	95.2
대학교	1	2.0	50	98.0
대학원	1	12.5	7	87.5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응답자의 7.0%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 응답자의 20.0%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58〉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장애인	28	7.0	374	93.0
장애인	4	20.0	16	80.0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의 경우 응답자의 7.3%가 “의료보장대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실업자의 경우 응답자의 8.8%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59〉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24	7.3	307	92.7
실업자	8	8.8	83	91.2

④ 만족도

“의료보장대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2명으로 6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으로 17.7%였고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6명으로 17.7%를 차지하였다.

〈표 4-60〉 의료보장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많이 도움 되었다	6	17.7
약간 도움 되었다	22	64.7
도움 안되었다	6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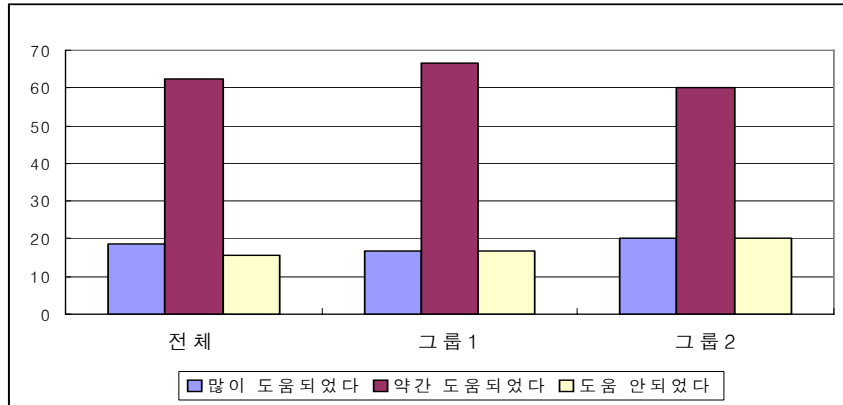
“의료보장 대책”에 참가한 경우의 만족도를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 24명 중 66.6%가 ‘약간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고 16.7%가 ‘많이 도움되었다’, 16.7%가 ‘도움 안되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룹 2의 경우 대상자 10명 중 60.0%가 ‘약간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고 20.0%가 ‘많이 도움되었다’, 20.0%가 ‘도움 안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그룹1과 그룹2의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61〉 의료보장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소득계층 그룹별)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많이 도움 되었다	4	16.7	2	20.0
약간 도움 되었다	16	66.6	6	60.0
도움 안되었다	4	16.7	2	20.0

[그림 4-6] 의료보장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비교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많이 도움되었다’ 19.2%, ‘약간 도움되었다’ 65.4%, ‘도움 안되었다’ 15.4%가 응답하였고 여자의 경우 ‘많이 도움되었다’ 12.5%, ‘약간 도움되었다’ 62.5%, ‘도움 안되었다’ 25.0%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서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62〉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많이 도움되었다		약간 도움되었다		도움 안되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5	19.2	17	65.4	4	15.4
여자	1	12.5	5	62.5	2	25.0

가구주 연령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30대와 80대의 경우 응답자가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고 50대의 경우 ‘많이 도움되었다’ 1명, ‘약간 도움되었다’ 1명, ‘도움 안되었다’ 1명이 응답하였다. 그리

고 40대와 60대의 경우 ‘약간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70대의 경우는 ‘약간 도움되었다’ 81.8%, ‘도움 안되었다’ 18.2%가 응답하였다.

〈표 4-63〉 가구주 연령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많이 도움되었다		약간 도움되었다		도움 안되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10대	0	0.0	0	0.0	0	0.0
20대	0	0.0	0	0.0	0	0.0
30대	1	100.0	0	0.0	0	0.0
40대	1	16.7	4	66.7	1	16.7
50대	1	33.3	1	33.3	1	33.3
60대	2	16.7	8	66.7	2	16.7
70대	0	0.0	9	81.8	2	18.2
80대	1	100.0	0	0.0	0	0.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문대와 대학원의 경우 응답자가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중학교의 경우 ‘많이 도움되었다’ 33.3%, ‘약간 도움되었다’ 66.7%가 응답하였다. 무학과 초등학교의 경우 ‘약간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만족도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4-64〉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많이 도움되었다		약간 도움되었다		도움 안되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무학	1	16.7	4	66.7	1	16.7
초등학교	2	13.3	10	66.7	3	20.0
중학교	1	33.3	2	66.7	0	0.0
고등학교	0	0.0	4	66.7	2	33.3
전문대	1	100.0	0	0.0	0	0.0
대학교	0	0.0	2	100.0	0	0.0
대학원	1	100.0	0	0.0	0	0.0

라. 거주대책에 대한 의견

① 거주대책

- 국민임대주택 건설
-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인상

② 인지도

“거주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19명으로 51.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8명으로 30.3%, ‘거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5명으로 17.8%를 차지하였다.

〈표 4-65〉 거주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거의 알고 있다	75	17.8
절반정도 알고 있다	128	30.3
거의 모르고 있다	219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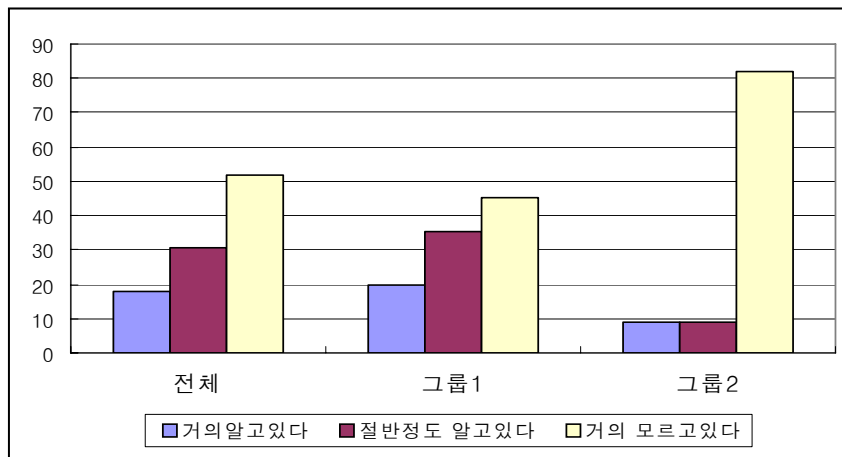
“거주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소득계층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의 45.1%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5.2%가 ‘절반정도 알고 있다’, 19.8%가 ‘거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룹 2의 경우 대상자의 82.1%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9.0%, ‘거의 알고 있다’는 9.0%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그룹1의 경우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 대책”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룹 2에 비해 인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66〉 거주대책에 대한 인지도(소득계층 그룹별)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거의 알고 있다	68	19.8	7	9.0
절반정도 알고 있다	121	35.2	7	9.0
거의 모르고 있다	155	45.1	64	82.1

[그림 4-7] 거주대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가구주 성별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대상자의 46.1%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3.8%가 ‘절반정도 알고 있다’, 20.1%가 ‘거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 대상자의 77.2%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15.2%, ‘거의 알고 있다’는 7.6%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가 여자에 비해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67〉 가구주 성별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69	20.1	116	33.8	158	46.1
여자	6	7.6	12	15.2	61	77.2

가구주 연령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30~40대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대와 70~80대의 인지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68〉 가구주 연령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10대	0	0.0	0	0.0	2	100.0
20대	1	16.7	2	33.3	3	50.0
30대	22	26.5	28	33.7	33	39.8
40대	20	18.3	46	42.2	43	39.4
50대	18	28.1	18	28.1	28	43.8
60대	8	11.1	20	27.8	44	61.1
70대	6	7.9	12	15.8	58	76.3
80대	0	0.0	2	20.0	8	80.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문대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33.3%, ‘절반정도 알고 있다’ 38.1%, ‘거의 모르고 있다’ 28.6%로, 고등학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24.6%, ‘절반정도 알고 있다’ 39.9%, ‘거의 모르고 있다’ 35.5%로 “거주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무학과 초등학교의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69〉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무학	2	3.1	10	15.4	53	81.5
초등학교	10	11.2	18	20.2	61	68.5
중학교	11	22.4	16	32.7	22	44.9
고등학교	34	24.6	55	39.9	49	35.5
전문대	7	33.3	8	38.1	6	28.6
대학교	8	15.7	19	37.3	24	47.1
대학원	3	37.5	1	12.5	4	50.0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장애인의 경우 ‘거의 알고있다’가 20.0%, ‘절반정도 알고 있다’ 45.0%, ‘거의 모르고 있다’ 35.0%로 비장애인에 비해 “거주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0〉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장애인	71	17.7	119	29.6	212	52.7
장애인	4	20.0	9	45.0	7	35.0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19.6%, ‘절반정도 알고 있다’ 32.3%, ‘거의 모르고 있다’ 48.0%로 비실업자가 실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71〉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65	19.6	107	32.3	159	48.0
실업자	10	11.0	21	23.1	60	65.9

③ 참여여부

“거주대책” 가운데 귀택에서 참여한 사업이 있는 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명으로 3.3%에 불과했으며 96.7%인 408명은 참여한 사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4-72〉 거주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있다	14	3.3
없다	408	96.7

“거주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소득계층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의 96.5%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5%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룹 2의 경우는 대상자의 97.4%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2.6%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2개의 그룹 모두 “거주 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73〉 거주대책에 대한 참여도(소득계층 그룹별)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있다	12	3.5	2	2.6
없다	332	96.5	76	97.4

가구주 성별에 따른 “거주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3.2%, 여자의 경우 3.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74〉 가구주 성별에 따른 거주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11	3.2	332	96.8
여자	3	3.8	76	96.2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거주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 3.0%, 실업자 4.4%의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75〉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거주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10	3.0	321	97.0
실업자	4	4.4	87	95.6

④ 만족도

“거주대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명으로 50.0%,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명으로 28.6%이며 3명이 무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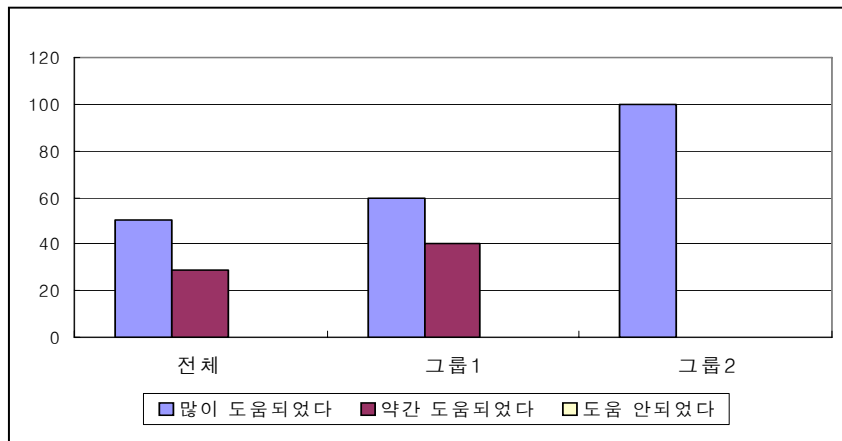
〈표 4-76〉 거주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많이 도움 되었다	7	50.0
약간 도움 되었다	4	28.6

“거주 대책”에 참가한 경우의 만족도를 소득계층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 10명 중 6명이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고 4명이 ‘약간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룹 2의 경우 대상자 1명이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그룹1과 그룹2의 “거주 대책”에 대한 참여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8] 거주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비교



마. 복지서비스대책에 대한 의견

① 복지서비스 대책

- 저소득층 대상 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사업
-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 제공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② 인지도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

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1명으로 5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2명으로 28.9%, ‘거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9명으로 11.6%임을 알 수 있다.

〈표 4-77〉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거의 알고 있다	49	11.6
절반정도 알고 있다	122	28.9
거의 모르고 있다	251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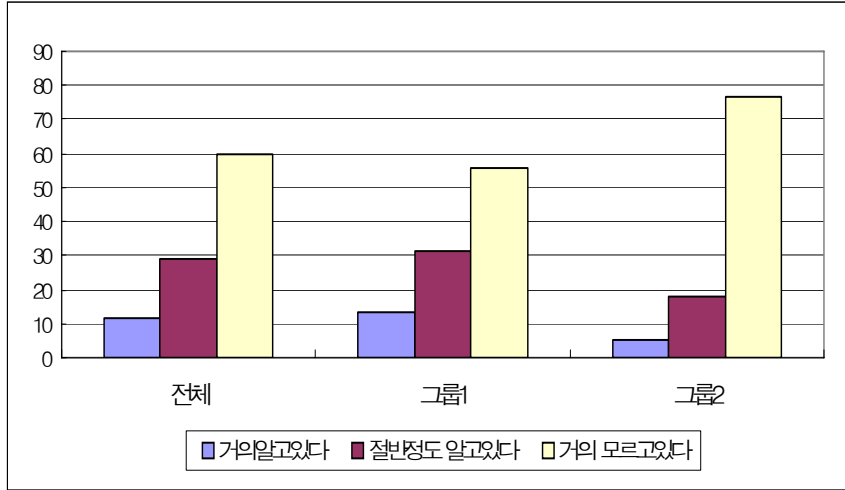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소득계층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의 55.5%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1.4%가 ‘절반정도 알고 있다’, 13.1%가 ‘거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룹 2의 경우 대상자의 76.9%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17.9%, ‘거의 알고 있다’는 5.1%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그룹1의 경우는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룹 2에 비해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78〉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소득계층 그룹별)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거의 알고 있다	45	13.1	4	5.1
절반정도 알고 있다	108	31.4	14	17.9
거의 모르고 있다	191	55.5	60	76.9

[그림 4-9]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가구주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대상자의 56.0%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1.2%가 ‘절반정도 알고 있다’, 12.8%가 ‘거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 대상자의 74.7%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정도 알고 있다’는 19.0%, ‘거의 알고 있다’는 6.3%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가 여자에 비해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79> 가구주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44	12.8	107	31.2	192	56.0
여자	5	6.3	15	19.0	59	74.7

가구주 연령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40~50대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10~20대와 80대의 경우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80〉 가구주 연령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10대	0	0.0	0	0.0	2	100.0
20대	0	0.0	1	16.7	5	83.3
30대	10	12.0	28	33.7	45	54.2
40대	17	15.6	35	32.1	57	52.3
50대	10	15.6	21	32.8	33	51.6
60대	8	11.1	19	26.4	45	62.5
70대	4	5.3	16	21.1	56	73.7
80대	0	0.0	2	20.0	8	80.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문대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23.8%, ‘절반정도 알고 있다’ 47.6%, ‘거의 모르고 있다’ 28.6%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무학과 초등학교의 경우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81〉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무학	2	3.1	12	18.5	51	78.4
초등학교	10	11.2	19	21.3	60	67.4
중학교	7	14.3	15	30.6	27	55.1
고등학교	17	12.3	46	33.3	75	54.3
전문대	5	23.8	10	47.6	6	28.6
대학교	6	11.8	18	35.3	27	52.9
대학원	2	25.0	2	25.0	4	50.0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11.9%, ‘절반정도 알고 있다’ 28.9%, ‘거의 모르고 있다’ 59.2%로 응답하였고 장애인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5.0%, ‘절반정도 알고 있다’ 30.0%, ‘거의 모르고 있다’ 65.0%로 응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82〉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장애인	48	11.9	116	28.9	238	59.2
장애인	1	5.0	6	30.0	13	65.0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13.3%, ‘절반정도 알고 있다’ 29.0%, ‘거의 모르고 있다’ 57.7%로 응답하였고 실업자의 경우 ‘거의 알고 있다’ 5.5%, ‘절반정도 알고 있다’ 28.6%, ‘거의 모르고 있다’ 65.9%로 응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83〉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알고 있다		절반정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44	13.3	96	29.0	191	57.7
실업자	5	5.5	26	28.6	60	65.9

③ 참여여부

“복지서비스 대책” 가운데 귀택에서 참여한 사업이 있는 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겨우 3명으로 0.7%에 불과했으

며 99.3%인 419명은 참여한 사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다른 생활안정대책에 비해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84〉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있다	3	0.7
없다	419	99.3

④ 만족도

“복지서비스 대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명이고 나머지 1명은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4-85〉 복지서비스 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많이 도움 되었다	0	0.0
약간 도움 되었다	2	66.7
도움 안되었다	1	33.3

바.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의견

① 참여도

“기타의 생활안정대책” 가운데 귀택에서 참여한 사업이 있는 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3명으로 22.0%였고

78.0%인 329명은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4-86〉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있다	93	22.0
없다	329	78.0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소득계층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의 86.6%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3.4%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룹 2의 경우는 대상자의 60.3%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9.7%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그룹 2의 경우 그룹 1에 비해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87〉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참여도(소득계층 그룹별)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있다	46	13.4	47	60.3
없다	298	86.6	31	39.7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17.8%, 여자의 경우 40.5%의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기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88〉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61	17.8	282	82.2
여자	32	40.5	47	59.5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80대의 경우 70.0%로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70대 63.2%, 60대 30.6%, 40대 8.3% 순의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89〉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10대	0	0.0	2	100.0
20대	0	0.0	6	100.0
30대	3	3.6	80	96.4
40대	9	8.3	100	91.7
50대	4	6.3	60	93.7
60대	22	30.6	50	69.4
70대	48	63.2	28	36.8
80대	7	70.0	3	30.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무학의 경우 55.4%로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36.0%, 대학교 13.7%, 대학원 12.5%, 중학교 12.2% 등의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90〉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무학	36	55.4	29	44.6
초등학교	32	36.0	57	64.0
중학교	6	12.2	43	87.8
고등학교	10	7.2	128	92.8
전문대	1	4.8	20	95.2
대학교	7	13.7	44	86.3
대학원	1	12.5	7	87.5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22.9%의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는 5.0%의 낮은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91〉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장애인	92	22.9	310	77.1
장애인	1	5.0	19	95.0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의 경우 16.9%의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고 실업자의 경우는 40.7%의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의 경우 비실업자 보다 기타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92〉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56	16.9	275	83.1
실업자	37	40.7	54	59.3

② 기타의 참여사업대책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93명 중 84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명이 영농자금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의 기타에는 ‘장애인 혜택’, ‘연금’, ‘등록금 지원’, ‘건강검진’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93〉 기타의 생활안정대책 중 참여한 사업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교통비 지원	84	89.6
영농자금 대출	3	3.1
기 타	6	7.3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사업에 대해 소득계층 그룹별로 살펴보면 그룹1의 경우 82.6%인 38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4%인 2명이 ‘영농자금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그 밖의 기타 13.0%는 ‘장애인 혜택’, ‘연금’, ‘등록금 지원’, ‘건강검진’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룹2의 경우는 97.9%인 46명이 ‘교통비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고 2.1%인 1명이 ‘영농자금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94〉 기타의 생활안정대책 중 참여한 사업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교통비지원	38	82.6	46	97.9
영농자금대출	2	4.4	1	2.1
기타	6	13.0	0	0.0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대책” 중 참여한 사업을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교통비 지원 86.9%, 영농자금대출 4.9%, 기타 8.2%로 응답하였고 여자의 경우 교통비 지원 96.9%, 기타 3.1%로 응답하였다.

〈표 4-95〉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 중 참여한 사업

(단위: 명, %)

구 분	교통비 지원		영농자금대출		기타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53	86.9	3	4.9	5	8.2
여자	31	96.9	0	0.0	1	3.1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대책” 중 참여한 사업을 조사해 본 결과 50대 이상의 경우 거의 대부분 교통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고 40대의 경우 교통비지원 44.4%, 영농자금대출 11.2%, 기타 44.4%로 응답하였다.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대책” 중 참여한 사업을 조사해 본 결과 대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수준에서 교통비 지원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대책” 중 참여한 사업을 조사해 본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교통비 지원 91.3%, 영농자금대출 3.3%, 기타 5.4%로 응답하였다.

〈표 4-96〉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 중 참여한 사업
(단위: 명, %)

구 분	교통비 지원		영농자금대출		기타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10대	0	0.0	0	0.0	0	0.0
20대	0	0.0	0	0.0	0	0.0
30대	2	66.7	0	0.0	1	33.3
40대	4	44.4	1	11.2	4	44.4
50대	4	100.0	0	0.0	0	0.0
60대	19	86.4	2	9.1	1	4.5
70대	48	100.0	0	0.0	0	0.0
80대	7	100.0	0	0.0	0	0.0

〈표 4-97〉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 중 참여한 사업
(단위: 명, %)

구 분	교통비 지원		영농자금대출		기타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무학	35	97.2	1	2.8	0	0.0
초등학교	29	90.6	1	3.1	2	6.3
중학교	5	83.3	0	0.0	1	16.7
고등학교	9	90.0	1	10.0	0	0.0
전문대	1	100.0	0	0.0	0	0.0
대학교	5	71.4	0	0.0	2	28.6
대학원	0	0.0	0	0.0	1	100.0

〈표 4-98〉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 중 참여한 사업
(단위: 명, %)

구 분	교통비 지원		영농자금대출		기타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장애인	84	91.3	3	3.3	5	5.4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대책” 중 참여한 사업을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의 경우 교통비 지원 85.7%, 영농자금대출 5.4%, 기타 8.9%로 응답하였고 실업자의 경우 교통비지원 97.3%, 기타 2.7%로 응답하였다.

〈표 4-99〉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 중 참여한 사업

(단위: 명, %)

구 분	교통비 지원		영농자금대출		기타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48	85.7	3	5.4	5	8.9
실업자	36	97.3	0	0.0	1	2.7

③ 만족도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9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명으로 65.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도움 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명으로 26.9%,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7명으로 7.5%를 차지하였다.

〈표 4-100〉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단위: 명, %)

	대상자수	백분율
많이 도움 되었다	7	7.5
약간 도움 되었다	61	65.6
도움 안되었다	25	26.9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에 참가한 경우의 만족도를 소득계층 그룹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룹 1의 경우 대상자 46명 중 65.3%가 ‘약간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고 21.7%가 ‘도움 안되었다’, 13.0%가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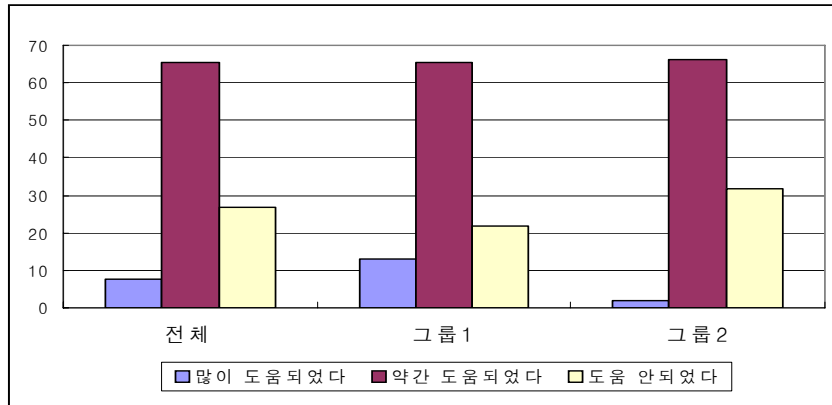
그룹 2의 경우 대상자 47명 중 31명인 66.0%가 ‘약간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고 31.9%가 ‘도움 안되었다’, 2.1%가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기타의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는 2개 그룹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101〉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소득계층 그룹별)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많이 도움 되었다	6	13.0	1	2.1
약간 도움 되었다	30	65.3	31	66.0
도움 안되었다	10	21.7	15	31.9

[그림 4-10] 기타의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비교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 ‘많이 도움되었다’ 9.8%, ‘약간 도움되었다’ 60.7%, ‘도움 안되었다’ 29.5%로 응답하였고 여자의 경우 ‘많이 도움되었다’ 3.1%, ‘약간 도움되었

다’ 75.0%, ‘도움 안되었다’ 21.9%로 응답하였다.

〈표 4-102〉 가구주 성별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많이 도움되었다		약간 도움되었다		도움 안되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남자	6	9.8	37	60.7	18	29.5
여자	1	3.1	24	75.0	7	21.9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30~40대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50대 이상의 경우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103〉 가구주 연령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많이 도움되었다		약간 도움되었다		도움 안되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10대	0	0.0	0	0.0	0	0.0
20대	0	0.0	0	0.0	0	0.0
30대	1	33.3	1	33.3	1	33.3
40대	3	33.3	6	66.7	0	0.0
50대	0	0.0	2	50.0	2	50.0
60대	2	9.1	14	63.6	6	27.3
70대	1	2.1	34	70.8	13	27.1
80대	0	0.0	4	57.1	3	42.9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고등학교와 대학원을 제외한 그 밖의 교육수준에서는 ‘약간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04〉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많이 도움되었다		약간 도움되었다		도움 안되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무학	1	2.8	25	69.4	10	27.8
초등학교	1	3.1	25	78.1	6	18.8
중학교	1	16.7	3	50.0	2	33.3
고등학교	1	10.0	4	40.0	5	50.0
전문대	0	0.0	1	100.0	0	0.0
대학교	2	28.6	3	42.9	2	28.6
대학원	1	100.0	0	0.0	0	0.0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많이 도움되었다’ 6.5%, ‘약간 도움되었다’ 66.3%, ‘도움 안되었다’ 27.2%로 응답하였다.

〈표 4-105〉 가구주 장애여부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많이 도움되었다		약간 도움되었다		도움 안되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장애인	6	6.5	61	66.3	25	27.2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비실업자의 경우 ‘많이 도움되었다’ 8.9%, ‘약간 도움되었다’ 62.5%, ‘도움 안되었다’ 28.6%로 응답하였고 실업자의 경우 ‘많이 도움되었다’ 5.4%, ‘약간 도움되었다’ 70.3%, ‘도움 안되었다’ 24.3%로 응답하였다.

〈표 4-106〉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기타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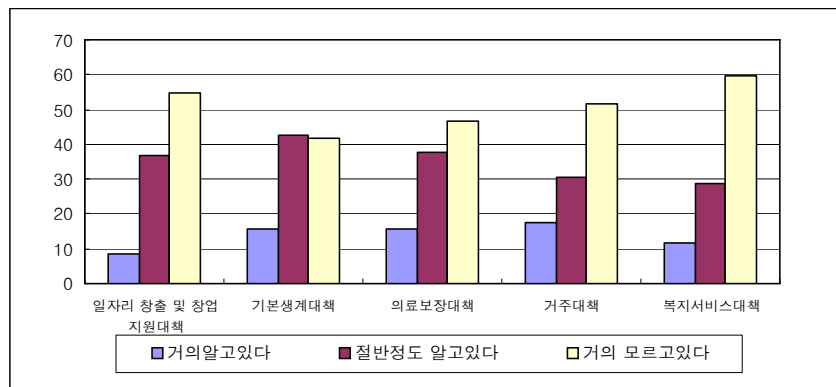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많이 도움되었다		약간 도움되었다		도움 안되었다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비실업자	5	8.9	35	62.5	16	28.6
실업자	2	5.4	26	70.3	9	24.3

사.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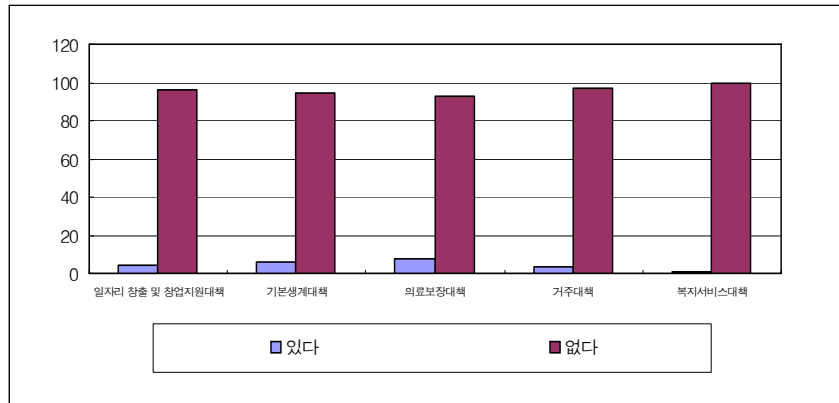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해 본 결과 기본생계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그림 4-11] 5가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비교시 의료보장대책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았으나 대부분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림 4-12] 5가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도 비교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경우의 만족도 비교시 거주대책에 대해 많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이었으며 대부분 참여한 경우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서비스대책에 대해서는 도움 안되었다는 응답이 30% 이상이 나왔다.

[그림 4-13] 5가지 생활안정대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비교

아. 전반적인 복지욕구 조사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 가운데 앞으로 귀택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대책에 대한 응답은 ‘기본생계대책’이 전체 응답자 422명 가운데 106명인 25.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9.3%인 81명이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대책’을, 18.6%인 78명이 ‘복지서비스대책’이라고 응답하였다. ‘의료보장대책’은 74명이 응답하여 17.5%를, ‘거주대책’은 47명인 11.1%를 차지하였다.

〈표 4-107〉 생활안정대책 가운데 앞으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대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수	백분율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대책	81	19.3
기본생계대책	106	25.0
의료보장대책	74	17.5
거주대책	47	11.1
복지서비스대책	78	18.6
기타	36	8.5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 가운데 앞으로 귀택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대책에 대해 소득계층 그룹별로 살펴본 결과, 그룹1의 경우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대책’이 23.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대책’이 20.1%, ‘기본생계대책’이 19.5%, ‘의료보장대책’이 15.7%, ‘거주대책’이 13.1%, 기타 8.4% 순으로 나타났다. 그룹2의 경우는 ‘기본생계대책’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보장대책’이 25.6%, ‘복지서비스대책’이 11.5%, ‘거주대책’이 2.6%,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대책’이 1.3%, 기타 9.0%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복지욕구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8〉 생활안정대책 가운데 앞으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대책에 대한 의견(소득계층 그룹별)

(단위: 명, %)

구 분	그룹1		그룹2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대책	80	23.3	1	1.3
기본생계대책	67	19.5	39	50.0
의료보장대책	54	15.7	20	25.6
거주대책	45	13.1	2	2.6
복지서비스대책	69	20.1	9	11.5
기타	29	8.4	7	9.0

전체 응답가구의 특성을 복지욕구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4-109>와 같다. 우선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앞으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대책으로 ‘기본생계대책’과 ‘의료보장대책’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보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았으며 ‘거주대책’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는 대도시 46.8%, 중소도시 38.3%, 읍·면 지역 14.9%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의 분포를 보면, 앞으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대책으로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대책’, ‘거주대책’, ‘복지서비스대책’이라고 응답한 가구들의 가구원수 4명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형태별 분포를 보면 각 복지욕구별로 일반가구(부부+자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기본생계대책’의 경우는 일반가구(29.2%)뿐 아니라 부부가구(30.2%), 단독가구(28.3%)의 분포가 서로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의 성별 특성을 보면 대부분 남성의 비율이 높으나 ‘기본생계대책’의 경우 다른 복지욕구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대책’, ‘거주대책’, ‘복지서비스대책’의 경우 30~40대 비율이 높으나 ‘기본생계대책’과 ‘의료보장대책’의 경우

60대 이상 비율이 50% 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복지욕구에서 고졸 학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본생계대책’의 경우 무학 28.6%, 초졸 34.3%로 학력이 낮음을 알 수 있고 주거현황을 보면 ‘거주대책’의 경우만 전세(48.9%) 비중이 높았고 대부분 자가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기본생계대책’과 ‘의료보장대책’의 경우 실업자의 비중이 각각 34.0%, 33.8%로 다른 복지욕구에 비해 실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 및 만성질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기본생계대책’의 경우 장애인 비율이나 만성질환자 비율이 다른 복지욕구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9〉 전체 응답가구의 복지욕구별 일반 특성

(단위: %)

구 분	응답가구 특성	창업지원 대책	기본생계 대책	의료보장 대책	거주대책	복지서비스 대책
지역	대도시 지역	38.3	19.8	37.8	46.8	38.5
	중소도시 지역	32.1	22.6	20.3	38.3	24.4
	읍·면 지역	29.6	57.5	41.9	14.9	37.2
가구원수	1명	6.2	29.2	10.8	4.3	6.4
	2명	4.9	34.0	33.8	8.5	15.4
	3명	17.3	9.4	18.9	10.6	14.1
	4명 이상	71.6	27.4	36.5	76.6	64.1
가구형태	일반가구 (부부+자녀)	84.0	29.2	47.3	83.0	73.1
	부부가구	4.9	30.2	29.7	4.3	10.3
	모자가구	0.0	0.0	1.4	0.0	0.0
	부자가구	0.0	0.9	0.0	0.0	1.3
	단독가구	4.9	28.3	9.5	4.3	6.4
	기타	6.2	11.3	12.2	8.5	9.0
성별	남	90.1	66.0	81.1	89.4	89.7
	여	9.9	34.0	18.9	10.6	10.3

〈표 4-109〉 계속

구 분	응답가구 특성	창업지원 대책	기본생계 대책	의료보장 대책	거주대책	복지서비스 대책
연령	10대	0.0	0.9	0.0	0.0	1.3
	20대	1.2	1.9	0.0	2.1	2.6
	30대	23.5	7.5	20.3	38.3	24.4
	40대	35.8	17.9	13.5	34.0	37.2
	50대	22.2	12.3	16.2	17.0	5.1
	60대 이상	17.3	59.4	50.0	8.5	29.5
학력	무학	4.9	28.6	20.3	6.4	9.0
	초등학교	11.1	34.3	16.2	12.8	12.8
	중학교	14.8	7.6	16.2	8.5	14.1
	고등학교	43.2	19.0	32.4	44.7	38.5
	전문대	9.9	3.8	2.7	8.5	3.8
	대학교	14.8	4.8	10.8	14.9	19.2
	대학원	1.2	1.9	1.4	4.3	2.6
주거현황	자가	69.1	67.0	73.0	23.4	66.7
	전세	14.8	16.0	6.8	48.9	19.2
	월세	8.6	9.4	9.5	19.1	7.7
	무상	7.4	7.5	10.8	8.5	6.4
장애인 여부	비장애인	96.3	94.3	94.6	95.7	96.2
	장애인	3.7	5.7	5.4	4.2	3.8
만성질환 여부	있다	16.0	44.3	33.8	6.4	15.4
	없다	84.0	55.7	66.2	93.6	84.6
취업여부	비실업자	92.6	66.0	66.2	97.9	85.9
	실업자	7.4	34.0	33.8	2.1	14.1

제 5 절 정책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중산·서민층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도시가계연보의 조세, 교육, 보건의료, 주거 등의 지출자료를 토대

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지금까지의 생활안정 대책이 중산·서민층의 가계경제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서민층의 지출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대표적인 조세정책인 소득세 감감대책이 중산·서민층보다는 고소득층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진성을 가진 간접세 비중이 경제위기 이후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에 우려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조세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사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높아 중산·서민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과 같이 소득계층의 세대간 고착화를 발생시키는 제도에는 공적보장의 기능을 확충시켜야 하겠다.

셋째, 저소득층의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소득대비 보건의료 및 주거비 지출 비중은 중산·서민층 가계경제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하여 중산·서민층의 빈곤화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사회안전망제도와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건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주요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점은 현행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생활안정대책이 중산·서민층 특히 서민층의 피부에 와 닿고,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우리사회는 1997년 말 발생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소득상실 위험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보고서(제2장)에서는 경제위기이후의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의 발생 여부,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이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어 중산서민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정책보다 포괄적인 소득재분배 정책도구인 소득세의 누진구조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며,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소득계층의 양극화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구조 분석결과 소득세의 누진율의 강화가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일 것이며, 특히 재산소득에 대한 누진율을 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한계계층,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 등의 소득분위별 생활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의 초점은 중산·서민층의 생활실태에 맞추어져 있으나 연구과정에서 다른 계층의 소비와 가구특성도 같이 분석되었다. 생활실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된 것은 가계수지부분이다. 소득에서 지출을 빼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로 구분하고 양 집단간 지출의 구성과 적자와 흑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변수를 찾고자 하였다.

우선, 적자가구의 비중은 소득수준이 내려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계계층의 경우 52%가 적자가구였으나, 서민층은 26%, 중산층은 15.4% 고

소득층의 경우 9.4%만이 적자가구였다. 적자의 원인은 소득이 불충분한 것과 소비가 과도한 것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각 소득 계층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소득의 격차보다 소비의 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비구성에 있어서는 적자가구가 거의 모든 소비항목에서 비적자가구보다 절대액 기준으로 소비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자규모와 흑자규모간 순격차는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적자가구의 적자규모의 증가보다도 비적자가구의 흑자규모의 증가가 절대액 수준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수지에서 적자를 내는 가구가 통상적인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배경을 확인해본 결과 적자가구는 총수입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비적자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자산감소로 인한 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상당수가 통상적인 소득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자산감소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소득계층내에서 적자가구는 비적자가구에 비해 소득은 조금 낮은 수준이나 지출은 크게 높아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들이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적자가구가 특정한 항목 예를 들어 교육이나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수요가 큰 집단일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절대금액 기준으로 지출수준이 높아 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4장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생활안정대책이 중산·서민층의 생활실태에 뚜렷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난 7년간 도시가계연보에 나타난 조세·교육·보건의료 등의 생활실태지표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지금까지의 생활안정대책이 중산·서민층의 가계경제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큰 파급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대표적인 조세정책인 소득세 경감대책이 중산·서민층보다는 고소득층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진성을 가진 간접세 비중이 경제위기 이후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에 우려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조세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높아 중산·서민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과 같이 소득계층의 세대간 고착화를 발생시키는 제도에는 공적보장의 기능을 확충시켜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보건의료 및 주거비 지출 비중은 고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중산·서민층 가계경제의 과행적 운영을 초래하여 중산·서민층의 빈곤화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사회안전망제도와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건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건전한 소득계층 구조형성에 필요한 향후 생활안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들 계층의 인적 특성, 생활실태, 복지욕구에 대한 심층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부록 참조).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는 많이 있었으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집중적 조사는 없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변화를 추적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feedback을 통해 정책을 적절히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류상영·강석훈,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1999. 7.
- 박순일,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사회복지제도의 평가와 효율화」, 『한국사회정책』, 제8집 제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01.
- _____, 황덕순, 최현수 등,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및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_____, 최현수 등,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_____, 등, 『사회복지제도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1).
- _____, 「복지사회를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 『복지국가와 민간 사회복지사업』, 1992년 10월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세미나, 1992(2).
- _____, 「경제·복지전환기에서의 복지정책의 대응방안」, 『한국사회정책』 제4집 1호, 한국사회정책학회, 1997.
- 연하청·이성표·박준경·김관영·한태선·홍종덕, 『중산층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0.
- 유경준·김대일,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2.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6~2000.
- 홍두승,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2002.

홍석표 외, 『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12.

홍성민·민주홍, 『IMF시대의 중산층 약화 실태 및 재구축방안』, 현대경제연구원, 1999. 10.

Hauser, Richard, and Becker, Irene, *Reporting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Springer, 2003.

부 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 이후 변화된 중산·서민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심층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위중산층·서민층의 소득·소비 및 자산·부채의 변화, 가구 여건, 건강상태, 고용상태를 파악하고, 이들 환경이 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가구주 등 취약서민계층의 실태와 복지욕구의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 진·출입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하여야 하고, 아울러 현행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한 만족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현행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는 많이 있었으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집중적 조사는 없었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빈곤 및 소득분배 동향과 중산·서민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제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아래 표에서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에 필요한 지표를 영역별로 제시해 보았다.

〈부표 1〉 중산·서민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지표

대지표	중지표
가계재정	<p>가계수입: 총수입액, 수입원</p> <p>가계지출: 총지출,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의료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조세, 사보험비, 기타</p> <p>부채: 부채유무, 부채규모, 부채월부담금, 부채빌린 곳, 상환연체여부</p> <p>자산: 부동산, 증권 등의 가치</p> <p>빈곤: 빈곤여부, 빈곤원인, 탈빈곤전망</p>
취업실태 및 욕구	<p>취업여부: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실업기간</p> <p>취업현황: 업종, 직종, 직명 및 직위, 근무형태, 근무시간, 사업장규모, 구직활동경로</p> <p>부업실태: 부업이유, 부업종류, 부업시간, 부업소득</p> <p>직업이력: 종사기간, 업종, 직종, 종사상지위, 근무형태, 사업장규모, 평균임금 혹은 사업소득, 실직 또는 사업중단 사유</p> <p>직업기술: 직업기술 보유정도, 해당직종</p> <p>취업 및 업종변경 희망: 변경희망 여부, 변경내용(업종, 직종, 종사상 지위, 근무형태, 사업장규모, 근로시간, 근로일수, 월평균 임금 혹은 사업소득), 준비 어려움</p> <p>취업지원서비스 실태: 직업훈련 참여경험(프로그램, 참여이유, 불참여이유), 참여희망(프로그램), 창업지원서비스 경험(프로그램, 문제점), 공공근로사업 참여경험(여부, 참여이유, 문제점), 자활사업 참여경험(여부, 프로그램, 향후 희망)</p> <p>취업지원 전달체계: 취업지원서비스 이용경로, 문제점, 희망사항</p>
건강상태 및 욕구	<p>가족건강상태, 질환여부, 의료기관 이용실태, 보건소 이용실태, 의료이용 비용(입원, 외래),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의료정책 만족도, 불만족 이유, 원하는 의료서비스</p>
주거실태 및 욕구	<p>주거형태, 주거의 질, 주거면적 및 욕구, 주거유형 및 비용, 주거지 환경, 주거 만족도</p>

〈부표 1〉 계속

대지표	중지표
가족보호실태 및 욕구	보호필요가구원 유무, 보호필요가구원 종류(미취학자녀, 장애인, 거동불편노인, 치매노인 등), 가족보호를 위한 취업중단 경험 사회적 지원서비스 욕구, 유료서비스 이용의향(보육, 간병, 기타서비스) 보육서비스 경험 및 만족도, 간병서비스 경험 및 만족도, 가사지원서비스 경험 및 만족도
사회보장실태 및 욕구	사회보험 가입여부(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장 수급여부 및 수급액(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중증장애인수당, 편부모가정수당, 기타 지원) 사회보장제도 만족도, 불만족 이유, 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정부정책 및 복지욕구 평가	각종 중산·서민대책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보완되어야 할 대책, 각 복지(노인, 장애인, 여성 등)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프로그램

□ 저 자 약 력 □

• 홍 석 표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공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차등지원 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2. (공저)

• 원 종 욱

미국 Purdu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백 화 중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 성 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파견관

• 홍 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06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A Study of Measures for Stabilizing the Living Conditions of
Low-to-Middle Income Groups

2003년 12월 일 인쇄 값 6,000원

2003년 12월 일 발행

저 자 홍 석 표 외

발행인 박 순 일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대표전화 : 02) 380-8000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예원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ISBN 89-8187-300-3 93330